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 논문

한일관계와 사과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연구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홍 성 표

한일관계와 사과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연구

지도교수 전 재 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홍 성 표

홍성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u>최 정 운</u>	(인)
부 위 원 장	<u>장 인 성</u>	(인)
위 원	<u>전 재 성</u>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일본의 정치적 사과에 대한 반발로써 발생하는 국내 정치적 반동의 원인을 분석한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10년 간 담화를 통해 사과를 표명하였고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의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아베 내각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사과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반복적인 사과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화해의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를 기존연구들은 사과에 대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 즉 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양국관계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반복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사과를 요구하는지, 왜 특정시점에 특정형태로 정치적 반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일본의 사과는 국내정치적 반동을 일으키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과와 반동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시기를 1991년 미야자와 내각부터 1998년 하시모토 내각까지를 제1기로, 1998년 오부치 내각부터 2009년 아소 내각까지를 제2기로, 2009년 하토야마 시기부터 2012년 노다 내각까지를 마지막 제3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과정추적 방법을 통해 각 시기별 국내정치적 변동이 반동발생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국내정치적 변동을 정당 간 경쟁(inter-party politics)과 정당 내 경쟁(intra-party politics)으로 구분하였고 제 3의 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변수와 국제정치적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1기(1991-1998)에서 반동의 원인은 보수와 혁신세력의 대결, 사회당과 자민당의 정당 간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탈냉전기와 함께 대두된 일본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의 선택의 필요성 속에서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의 사과외교를 택했다. 하지만 반복된 사과표명은 원내 및 당내 반(反)사과세력들로부터 반동을 야기했고 다음으로 집권한 자민당의 하시모토 총리와 의원들은 사회당의 사과 및 반성정책을 부인

및 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동을 일으켰다.

제2기 (1998-2009)에서 반동의 원인은 자민당 내의 보수리버럴(헤이세이/코치)과 보수우파(세이화)의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발발한 아시아 경제위기와 북핵위기 및 테러발발로 인한 물리적 위협을 안고 출범한 보수리버럴의 오부치 내각은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후 집권한 보수우파 고이즈미는 기존 보수리버럴 세력들이 추구해온 국내적 및 대외적 정책노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제3기(2009-2012)에서 반동의 원인은 민주당 내의 중도보수, 중도좌파, 강경보수 간의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反)자민노선으로 출범한 중도보수인 하토야마 총리와 중도좌파 성향인 간 총리는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외교 노선을 강화시키고 사과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집권 후반, 센카쿠 분쟁을 기점으로 중국의 물리적 위협은 점차 심화되었고 이는 역으로 강경보수 성향인 노다 총리의 반동노선을 강화시켰다. 더욱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요구발언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응은 민주당의 친아시아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향후 아베 내각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는 진정성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사과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다. 둘째, 한일 간 안정적 단계의 화해로 가기 위한 핵심은 또 한 번의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동의 관리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일관계에서 사과문제는 미래 양국관계의 정체성의 변화와 관계회복의 중요한 열쇠이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차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아베 내각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과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주요어: 정치적 반동, 사과, 사과-반동 메커니즘, 정당 간 경쟁, 정당 내 경쟁

학번: 2013-22890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검토 및 한계	5
3.	연구방법과 분석틀	9
1)	연구방법	9
2)	연구대상	11
3)	연구시기	15
4)	분석틀	17
II.	사과와 화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
1.	사과의 개념	19
2.	사과의 이론적 단계	21
3.	화해의 개념	22
4.	화해의 이론적 단계	25
5.	사과와 화해의 이론적 종합과 현재 한일관계에의 적용.....	27
1)	사과와 화해의 이론적 종합.....	27
2)	현재 한일관계에의 적용: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28
III.	제1기: 보수와 혁신의 대립: 사과와 반동의 서막(1991-1998)...	34
1.	사과외교의 등장: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 (1991-1996)...	34
2.	혁신세력의 위기와 반동의 시작: 하시모토 내각 (1996-1998)...	46
3.	소결.....	51
IV.	제2기: 자민당 내 파벌경쟁과 고이즈미의 등장: 반동의 10년(1998-2009)..	53
1.	보수리버럴의 재기와 사과외교로의 복귀: 오부치 내각(1998-2000)	53
2.	보수우파의 등장과 반동의 가속화: 모리,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 내각 (2000-2009)	58
3.	소결	66
V.	제3기: 민주당 내 파벌경쟁과 몰락: 무너진 사과세력, 반동의 심화 (2009-2012)	69
1.	무너지는 사과세력: 하토야마, 간 내각(2010-2011).....	69
2.	되돌릴 수 없는 반동의 영역으로: 노다 내각(2011-2012)	74
3.	소결	78
VI.	결론	80
	참고문헌.....	85

표 목차

<표 I-1>	사과 문제의 쟁점과 표출방식.....	11
<표 I-2>	사과지지, 중립, 반대 세력들의 구분.....	13
<표 I-3>	자민당 내 정책집단(파벌).....	14
<표 I-4>	민주당 내 그룹.....	14
<표 I-5>	역대 정권 및 총리의 사과입장 추이.....	16
<표 I-6>	본 연구의 분석틀.....	18
<표 II-1>	사과의 구성요소와 단계.....	22
<표 II-2>	화해의 구성요소와 단계.....	27
<표 II-3>	사과와 화해의 단계	27
<표 II-4>	역대 한국정부와 정대협의 의견 일치여부.....	32
<표 III-1>	역대 총선에서의 보수와 혁신의 의석수 및 득표율	35
<표 III-2>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39
<표 III-3>	관념적 반동에 대한 무라야마 내각의 시정조치.....	45
<표 III-4>	일본 내 대전략노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47
<표 III-5>	하시모토 내각 등장 후 파벌의 변화.....	49
<표 III-6>	반사과세력 모임의 형성 추이.....	50
<표 III-7>	제1기 사과 흐름에서 반동 흐름으로의 전회.....	50
<표 IV-1>	2000년대 일본의원들의 보수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64
<표 IV-2>	제2기의 사과적 흐름에서 반동흐름으로의 전회.....	66
<표 V-1>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69
<표 V-2>	하토야마의 ‘반(反)자민’ 노선.....	70
<표 V-3>	제23회 참의원 선거 결과.....	71
<표 V-4>	간의 ‘반(半)자민’ 노선.....	73
<표 V-5>	친(親)오자와파와 반(反)오자와파의 정당 내 경쟁양상	74
<표 V-6>	노다의 ‘친(親)자민’ 노선	76
<표 V-7>	제46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77
<표 V-8>	제3기의 사과적 흐름에서 반동흐름으로의 전회.....	77

I. 서론

1. 문제제기

국제정치는 갈등과 화해의 순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은 이와 같은 반복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간 갈등과 화해에 연구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화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갈등과 화해의 연구를 연결해줄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학자들은 갈등과 화해의 연결고리로써 사과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코헨(Cohen), 웨이네스(Weyeneth), 도즈(Dodds), 레이몬드(Raymond) 등 다수의 학자들은 국제정치에서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사과가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¹⁾ 즉 이들의 주장은 진정한 사과 없이는 갈등에서 화해로 넘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 간 사과와는 달리 국가 간 사과는 단순히 양자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각국의 정부, 국내정치적 행위자, 국제정치적 환경이 얹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제정치학에서 사과

1) 국제정치학에서의 사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Jennifer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Raymond Cohen, "Apology and Reconcil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Yaacov Bar-Siman-Tov (eds.),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Graham Dodds, "Political Apologies and Public Discourse," in Judith Rodin and Stephen P. Steinberg, (eds.), *Public discourse in America: conversation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3); Robert R. Weyeneth, "The Power of Apology and the Proces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The Public Historian*, Vol. 23, No. 3 (2001); Melissa Nobles, *The politics of official apolo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 국가 간 화해의 유형과 가해국 정책 결정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 『역사교과서의 대화-유럽은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서울: 역사비평사, 2006)

의 학문적 중요성은 비록 간과되었지만 갈등과 화해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과 문제의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독일의 전후 보상과 사과는 1960년 중반 하이네만 대통령과 브란트 총리의 독일의 침략 인정과 이에 대한 사과 발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사과 역시 해당 정부 내의 정치적 역학과 국제정치적 상황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의 결과물이었다. 그로서(Grosser)가 지적하듯이 독일 사과연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독일이 적극적인 사과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주변국들과의 상당 수준의 화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²⁾

독일과 가장 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을 꼽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의 단계에서 단순한 협력을 넘어 안정적 단계의 화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태도, 또 이를 수용하는 한국의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학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³⁾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사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일관계는 독불관계와 같이 안정적 단계의 화해로 넘어가지 못하는가? 1세대 사과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가?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표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하지만 1세대 사과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지적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2) 독일의 정치학자 그로서(Grosser)에 따르면 1944년 프랑스의 대독(對獨)인식은 ‘적국은 아닌 독일(no enemy but Germany)’ 이었다. 하지만 1960년에는 ‘친구는 아닌 독일(no friend but Germany)’ 에서 1965년에는 ‘프랑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the best friend of France)’ 로 바뀌었다. Alfred Grosser, *French foreign policy under De Gaulle* (Greenwood Press, 1977)

3) Weyeneth, 2001; Stephen Benfell, "Why Can't Japan Apologize? Institutions and War Memory Since 1945," *Harvard Asia Quarterly*, (2002); Dodds, 2003; Nobles, 2008; 히라이와 순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하영선, 오코노기 편,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12); 「한겨레」, 2009년 12월 6일; 「한겨레」, 2015년 12월 29일; 「중앙일보」, 2015년 12월 28일.

한국에게 장관, 총리 그리고 일왕의 수준에서 수차례의 공식사과를 하였다.⁴⁾ 대표적인 사과로는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오부치 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를 들 수 있다. 위 담화들은 국내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요구하는 식민지 지배, 침략에 대한 인정, 위안부의 일본군 강제적 동원 인정과 이에 대한 공식 사과였다. 한국 정부는 완벽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1998년에는 오부치 총리의 사과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양국이 화해까지 선언하기도 하였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2015년 12월 28일 아베 내각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사과를 표명하였다. 기시다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고 밝혔다. 이어 “아베(신조)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⁶⁾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동 추진한 한국정부는 이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양국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자들이 속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야당은 즉각 반발하였고 즉각적으로 재(再)사과를 요구하였다.⁷⁾ 한일 간의 사과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완결의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 1세대의 ‘사과표명여부’에 집중하는 접근

4)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사과, 1992년 미야자와 총리 사과, 1993년 호소카와 총리 사과, 1993년 고노 장관 사과, 1995년 무라야마 총리 사과, 1998년 오부치 총리 사과,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사과, 2010년 간 총리 사과 등을 들 수 있다.

5)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kr.emb-japan.go.jp/rel/r_eco/r_eco_981008_01.htm (검색일: 2016년 2월 17일)

6) 「한겨레」, 2015년 12월 28일.

7) 「조선일보」, 2015년 12월 28일.

방식으로는 한일 간 사과 문제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왜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일본은 사과를 반복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가?’이다. 즉 질문의 핵심을 일본의 사과 ‘표명’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사과를 둘러싼 ‘메커니즘’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질문에 대한 사과 연구들의 답은 무엇인가? 2세대 사과연구들은 독일과 일본 사과의 핵심적 차이를 ‘정치적 부인(denial)’으로 부터 찾고 있다. 도즈, 린드(Lind), 노블스(Nobles), 벤펠(Benfell)은 일본이 반복적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사과에 대한 ‘국내적 반동(political backlash)’으로부터 찾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과거 침략 및 잔혹 행위에 대한 뉘우침과 사과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국내 반(反)사과 세력들이 이를 부인하는 반동이 한국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양국관계가 악화된다고 지적한다.⁸⁾ 이와 같은 2세대 사과연구들의 주장은 최근의 설문조사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한일관계를 가로 막는 요소에 대해 한국 국민은 독도문제(92.6%),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52.2%), 일본 정치인들의 언행(36.9%)의 순으로 답변했고 일본 국민 역시 독도문제(68.9%), 한국의 반일감정(46.6%), 한국의 역사인식(40.0%)의 순으로 답변했다.⁹⁾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한일관계에서 역사인식과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상호 부정적 인식이 순환되고 있으며 관계악화의 원인이 어떤 한 국가가 아닌 양국 모두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8) Jennifer Lind,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 18, No. 3, (2009), p. 520.

9) 동아시아연구원, Genron 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2013, 2014, 2015 참조.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1110181300&category=24&code=kor_report&idx=13070 (검색일: 2016년 4월 7일) 동아시아연구원과 Genron NPO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한국인 1,004명,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일 양국 국민인식을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양국 인식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41개의 공통 문항 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할 연구대상은 바로 반동에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사과는 국내 정치적 반동을 일으키는가?” 이것이 본 연구가 던지고자 하는 핵심 연구 질문이다. 기존 1세대 또는 2세대의 접근방식처럼 사과와 반동을 본질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동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 것은 현재 한일관계의 뒤틀림을 설명하는데 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사과가 표명될 수 있었는지, 사과에 따른 반동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또 반동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재(再)사과 또는 재(再)반동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호 부정적 인식의 깊은 골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존연구검토 및 한계

한일관계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기존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력(화해)과 갈등에 관한 연구¹⁰⁾와 둘째, 두 영역 간 연결고리 역할로써 사과문제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한일 간의 사과문제는 다시 수사학적 연구¹¹⁾와 정치적 역학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있다..

10) 협력(화해)과 갈등에 관한 연구는 첫째, 국제 및 지역구조 변수와 둘째, 각 국가의 국내 변수를 기준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전진호, "21세기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Vol. 3 (2005), pp. 97-125 ; Tsuyoshi Hasegawa and Kazuhiko Togo (eds.), *East Asia's Haunted Present: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ABC-CLIO, 2008); 이원덕,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하여,” 하영선, 오코노기 편, 2012; 소에야 요시히데, “중국의 대두와 한일협력,” 하영선, 오코노기 편, 2012; 히라이와 순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하영선, 오코노기 편, 2012; 그 외 동북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양국관계에 관한 논의는 손열,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연구원, 2008); Richard Samuels, *Securing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아미테이지, 리처드·L & 조세프·S·나이, “日米同盟vs.中国・北朝鮮,” (東京: 文藝春秋, 2010) 참조; 후자의 경우는 박영준,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일본비평』, Vol. 12, (2015), pp. 134-167; Cheol Hee Park, “Historical Memory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in Korea,” in Tsuyoshi Hasegawa and Kazuhiko Togo (eds.), 2008. pp. 190-204. 참조.

분쟁 국가 간 화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사과의 기준이다. 가해국의 입장에서 어떤 사과를 제시해야 하고 또 수용국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과를 평가하고 받아들일지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수사학적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기준 제시에 그 의미와 강점이 있다. 일례로 피해국이 요구하는 침략(aggression), 식민지배(colonial rule), 통절한 반성(profound remorse), 진심으로 사과(heartfelt apology)와 같은 문구의 삽입여부를 통해 공식 사과로써의 충족여부, 진정성 그리고 수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¹²⁾ 수사학적 연구는 가해국이 표명한 각 사과문의 진정성 및 수용가능성에 관한 평가에는 유용하지만 왜 반복된 사과가 갈등을 유발하는지, 왜 일본이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지와 같은 사과를 둘러싼 역학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즉 각 사과문제의 단편성은 설명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과문제의 연결성은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사과의 정치성과 이를 둘러싼 역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과의 정치적 역학에 관한 연구는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 사과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사과연구의 질문은 ‘왜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는가’ 또는 ‘왜 일본은 사과를 해야만 하는가’이다. 벤펠은 전후 치러진 도쿄재판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도쿄재판은 전범들과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는 전쟁국가로서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벤펠은 국내 보수우파들의 역사인식에 의해 사과가 더 어려워지며 이익집단의 세력화와 과거사 문제의 정치화, 제도적인 문제들이 사과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¹³⁾ 이원덕은 한일 신시대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이 식민화 과정과 통치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¹⁴⁾ 그렇다면 일본이 표명한 수차례의 사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1) Jane Yamazaki, *Japanese apologies for World War II: A rhetorical study*. Routledge, 2012.; 김영옥, “병합 100 년, 일본은 사과했는가?,” 『언론과 사회』 Vol. 19. No. 1, (2011), pp. 75-113.

12) 천자현, “국제정치에서 공식적 사과의 이론과 실제: 공식적 사과의 분류와 일본 사과문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Vol. 54. No. 3, (2014), pp. 113-140.

13) Benfell, 2002.

가? 벤펠의 지적처럼 국내 보수우파들의 역사인식에 의해 사과가 더 어려워진다면 보수적 역사인식을 가진 자민당의 오부치 총리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표명한 사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사과문제 미해결의 근본적 원인을 보수우파의 역사인식과 명확한 사과부재로 귀결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사과문제의 동학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세대 사과연구의 질문은 ‘왜 일본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가’이다. 다시 말해, ‘왜 일본의 사과는 독일의 사과처럼 효과적이지 못한가’에 관한 질문이다. 린드는 일본의 사과가 효과적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으로부터 찾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적극적인 사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부인(denial)’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는 반대세력들로부터의 정치적 반동(political backlash)을 야기하고 이는 오히려 양국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요구하는 진정성 어린 사과 표명이 화해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린드의 핵심 논지이다. 린드는 사과의 수사적인 측면보다 이로 인한 정치적 반동에 더 집중한 하지만 정치적 반동의 구조적인 원인의 연구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그친다.¹⁵⁾

3 세대 사과연구의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일본의 사과는 국내정치적 반동을 일으키는가’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과문제에 대한 정치적, 국제정치적 역학을 이론적, 경험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일관계의 변화를 보

14) 이원덕, 2012; 손열, “일본의 21세기 동맹전략-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EAI, NSP Report 34』, 2009.

15) Lind, 2009. p. 548; 반동의 사례는 언급하지만 그 구조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천자현, 2012;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 (오름, 2006); 이원덕, 2012; Lind, 2011. ; Marc Howard Ross, “Ritual and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Yaacov Bar-Siman-Tov (eds.),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Hasegawa and Togo, 2008; Benfell, 2002; 木宮正史, “日韓関係の力学と展望: 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 国際基督教大学学報 II-B, 『社会科学ジャーナル』 Vol. 61 (2007), pp. 5-25.

여중으로써 한일관계 이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복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여전히 사과를 요구하는지, 왜 일본에서는 사죄병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지, 왜 특정시점에 정치적 반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3 세대 사과연구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관계의 역사문제에 중심에 있는 사과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사과로 인한 일본 국내의 정치적 반동을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그로 인한 한일관계의 변화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린드가 지적하듯이 한일관계가 회복의 궤도로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 반동에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독립변수로 상정한 채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피상적인 연구 밖에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일관계 변화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일본의 국내 정치적 반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한일관계의 사과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설명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사과와 반동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정치적 반동에 집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역사인식으로 귀결시켜왔다. 하지만 정치적 반동은 철저한 정치적인 행위이며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다. 대표적으로 보수적 역사인식을 가진 자민당의 오부치 총리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점과 2012년 민주당의 노다 총리가 A급 전범들을 부정하고 사과표현을 회피하였다는 점은 사과와 반동을 개인 및 정당의 역사인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사과와 반동을 분석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의 사과-반동의 정치적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통해 한일관계의 갈등과 화해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연구에 사과문제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일 양국이 협력을 위한 무수한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의해 협력이 지배받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과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다소 부족했다. 따라서 사과문제와 이로 인한 반동의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을 통해 협력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역사문제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과 분석틀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research)를 통해 단순한 역사적 기술(historical narrative)보다 분석틀을 기반으로 각 시기적 단계에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적 설명(analytic explana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⁶⁾ 이를 위해 과정추적의 방법(process-tracing method)을 사용하고자 한다.

과정추적의 방법이란 진단적 증거(diagnostic evidence)와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사례에서 사건의 과정과 연속성(sequence)을 추적함으로써 사례의 결과가 도출되는 인과적 과정(causal process) 혹은 인과적 매커니즘(causal mechanism)을 밝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즉, 특정 시기의 사건들을 단순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발견을 통해 도출된 증거(변수)를 중심으로 기술적/인과적 추론을 이끌어내는 연구 및 서술방법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를 위해 각 시기별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결과를 통해 형성된 선거지형 속에서 일본의 국내정치적 변동이 반동발생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일본의 국내정치적 변동을 정당 간 경쟁(inter-party

16) Alexander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2005);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과정추적에 대한 논의는 Jeffrey T. Checkel, "Process Tracing," in Audie Klotz and Deepa Prakash (ed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luralist Guide*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8), pp. 114-130; Andrew Bennett and Alexander George, "Case Study and Process Tracing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in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2001), pp. 137-166; James Mahoney, "The logic of process tracing tests in the social scienc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12)를 참조.

17) Andrew Bennett and Jeffrey Checkel, (eds.), *Process trac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7-9.

18) David Collier, "Understanding process tracing,"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44, No. 4 (2011) p. 824.

competition)과 정당 내 경쟁(intra-party competition)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가 반동의 심화 또는 약화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¹⁹⁾을 밝히고자 한다. 정당 간 경쟁과 정당 내 경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제 3의 변수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변수와 국제 정치적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 사과의 수사학적 분석보단 사과와 반동을 둘러싼 정치성을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²⁰⁾ 따라서 분석의 비중을 총리 및 의원들이 표명한 사과의 수사학적인 분석보단 사과의 표명과 반동의 표출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에 관련된 1차 및 2차 자료들을 토대로 문서 연구(archive research)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1차 자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관념적 반동, 즉 망언과 관련된 자료들과 둘째, 행동적 반동, 즉 신사참배, 교과서개정, 보수, 우익적 단체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로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는 주요 행위자들의 연설문, 국회의 대정부 질의 기록, 잡지, 저서, 총리 및 정치인들의 회고록, 정책 및 언술에 관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참고한다. 후자는 정부 및 정당들의 정책관련 공식문서들과 초당파적 의원 모임 등의 활동 내용, 의원들의 정책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외 언론기사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반동에 있어 사과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각 사과의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외무부)의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 발간한 문서 또는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사과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가 및 관련 단체의 반응을 살펴보고 왜 한국이 재(再)사과를 요구하는지 또는 일본의 반동/재(再)반동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9) 본 연구는 Mahoney의 정의에 따라 메커니즘을 ‘원인과 결과를 매개하는 무엇(something that intervenes between a cause and outcome)’이라고 정의한다. Mahoney, 2015, p. 205.

20) 일본 사과의 수사학적 분석은 Ja hyun Chun, “Beyond “Dissatisfaction” and “Apology Fatigue” : Four Types of Japanese Official Apology,” *Pacific Focus*, Vol. 30, No. 2 (2015), pp. 249-269; Yamazaki, 2012. pp. 62; 김영옥, 2011를 참조.

언론기사의 경우 일본 측 기사와 한국 측 기사 모두 활용한다. 일본 신문의 경우,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社),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고 교도통신(共同通信社), 산케이신문(産経)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고,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경우 ‘일본의 사과와 이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동’으로 설정하고 사과의 쟁점을 크게 ‘침략 및 식민지배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표현으로 규정’한다.²¹⁾ 따라서 일본의 사과란 위의 두 쟁점들에 관한 반성적 표현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서의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망언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표 I-1> 사과 문제의 쟁점과 표출방식

사과 문제의 쟁점							
쟁점	침략 및 식민지배 문제				위안부 문제		
표출방식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망언	연맹형성	교과서 왜곡	망언	연맹형성

정치적 반동의 경우 ‘일본의 총리, 의원들이 현재 또는 과거의 내각(총리)에서 표한 사과에 대해 문제제기 또는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 및 비공식 차원에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관념적 및 행동으로 표출하는(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한다. 관념적인 반동은 언어행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사과 쟁점에 관한 망언 또는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행동적인 반동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역사 수정주의적 연맹의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정치적 부인’을 넘어서 행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반동’의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반동의 양상은 크게 정체성에 기인한 반동과 한국에 기인한 반동

21) 한일관계에서 독도 문제, 강제노동자 문제, 배상의 문제는 법적영역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체성에 기인한 반동은 정당 간 반동과 정당 내 정파 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반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당 간 반동의 경우 사회당, 민주당, 자민당의 기본노선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 집권당의 차기 집권당이 다를 경우, 차기 집권당은 정치적 차별성을 위해 이전 집권당의 기본노선에 반대되는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정당 내 정파 간 관계에서 빚어지는 반동의 경우는 정파 간의 권력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민당 내의 강경보수 세력인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反)사과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의 세이와정책연구회가 집권할 경우 반동흐름으로의 외교가 대두되게 된다. 반대로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의 경우 친(親)아시아정책 노선을 견지하며 사과를 강조하는 세력이다. 이들이 집권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과외교가 대두되게 된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하토야마 세력), 중도좌파(간 세력), 강경보수(노다 세력)의 세력들 중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사과 또는 반동의 기본 기조가 설정된다. 따라서 각 시기별 및 내각별로 집권하는 세력들을 분석함으로써 사과외교 및 반동외교의 등장을 예측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본노선과 실제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와 같은 불일치의 발생에 한국변수와 지정학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체성에 기인한 반동을 통한 예측 및 분석 방식은 사과 및 반동의 기본 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의 방식, 정도, 또는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설명적 한계는 한국에 기인한 반동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국이 지속적인 사과 요구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사과에 이은 끊임없는 재(再)사과의 요구는 일본으로 하여금 사과 피로(apology fatigue)를 느끼게 하며 반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사과에 대한 한국의 자극적인 외교적 반응이 반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세력들의 구분을 통한 사과 및 반동의 향방을 분석하고 한국의 반응 및 대응을 통해 그 방식과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양국 내 행위자들 설정은 정치적 영향력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일본은 정권과 정당, 총리, 의원, 반사과세력 연맹을 주 행

위자, 시민단체를 보조행위자로 설정하고 한국은 정부를 주 행위자로 특정 시민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를 보조행위자로 설정하였다.²²⁾ 일본 정당 내에서 사과 지지세력, 중립, 반대세력으로 일차적 구분을 하고, 각 시기별 각 세력들의 분포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단순 보수 대 혁신 또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이분법적 구분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표 I-2> 사과지지, 중립, 반대 세력들의 구분

	년도	사과 지지	사과 중립(유동적)	사과 반대
제1기	91-96	사회, 자민(코치), 일본신당	공명	자민(세이화)
	96-98	사민	자민(헤이세이), 공명	자민(헤이세이, 세이화)
제2기	98-00	사민, 자민(헤이세이)	공산, 공명	자민(세이화)
	00-09	사민, 민주	공명	자민(세이화)
제3기	10-11	민주	민나노, 공명	자민(세이화)
	11-16	사민	민나노, 공명	민주, 자민(세이화)

[출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1991-2016)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다음은 자민당 내 파벌의 구분이다. 현재는 파벌이라는 용어 대신 ‘정책집단’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²³⁾ 자민당 내에도 여러 노선들이 있으며 세이와정책연구회, 헤이세이연구회, 고치카이(宏池会), 이코카이(為公会), 시스이카이(志師会), 반쵸정책연구소(番町政策研究所), 총 5개의 파벌로 분류할 수 있다. 자민당 내에서 각 파벌의 집권여부는 사과 및 반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들을 구분해서 접근 및 분석하고자 한다.

22) 각국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논문은 정미애,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일본연구』, Vol. 37, (2008);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를 참조.

23) 고선규, “일본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배경,” 『일본공간』, Vol. 18 (2015), pp. 58-95.

<표 I-3> 자민당 내 정책집단(파벌)

연구회	파벌 영수의 변화	기본노선	
세이화 (清和)	후쿠다→아베→미쓰즈카→ 모리→마치무라→호소다	미일관계중시, 헌법개정, 자주국방, 재군비	
헤이세이 (平成)	다나카→다케시타→오부치→ 하시모토→쓰시마	보수본류, 친중, 친한, 아시아외교중시	
코치 (宏池)	오히라→스즈키→미야자와→ 가토→코가→기시다	미일관계중시, 중도온건파, 자유주의 가치 강조	
이코카이 (為公会)	고노→ 아소	고노	친중, 온건
		아소	친대만, 강경
시스이카이 (志帥)	나카소네→와타나베→에토 →아마자키	개헌지지, 대북강경, 전통문화 강조, 우정민영화 반대	
반쵸 (番町)	미키→가와모토→고무라 →오시마	자민당 내 좌파	

[출처: 고선규, 2015, pp. 58-95를 참고하여 필자 재작성]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경우, 증세문제, 대외적으로는 미일외교와 아시아외교를 기준으로 친(親)오자와와 반(反)오자와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당내에서 어떤 그룹이 집권하느냐는 사과 및 반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정당 내 세력의 구분은 하토야마, 간, 노다의 상이한 외교정책을 이해함에 필수적이다. 24)

<표 I-4> 민주당 내 그룹

그룹 명칭	그룹 리더	기본성향 및 노선
일신회 (一新會)	오자와	증세반대, 친아시아
(로운카이) 凌雲會	마에하라	[보수/반(反)오자와] 증세찬성, 개헌찬성
정권전략연구회	하토야마	[중도보수/친(親)오자와] 증세반대, 친아시아, 미일외교대등
나라의 형태연구회	간나오토	[중도좌파/반(反)오자와] 증세찬성, 친아시아
화제회 (花齊會)	노다	[강경보수/반(反)오자와] 증세찬성, 아시아외교강경

[출처: 현대일본학회, 2008, p.209; 박철희 외, 2014, pp. 70-93 참조]

24) 의원 그룹이 존재하지만 자민당과 달리 파벌이라 부르지 않지만 파벌에 상당하는 집단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 2008), p. 209.

3) 연구시기

연구시기의 경우 1991년을 기점으로 총 3 시기로 구분을 하고자 한다. 제1기는 1991년 미야자와 내각부터 1998년 하시모토 내각까지, 제2기는 1998년 오부치 내각부터 2009년 아소 내각까지, 제3기는 2009년 하토야마 시기부터 2012년 노다 내각까지로 구분한다.

시기적 설정 및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제는 1990년대 들어와 양국관계에서 쟁점화가 되었다. 냉전기 시기에도 사과 문제가 존재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군부정권의 존재로 인해 지금과 같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정부(각료)와 총리차원에서 ‘사과’를 표명한 것은 미야자와 내각이다. 따라서 연구의 시작을 1991년을 잡고 있다. 셋째, 한일관계에서의 사과와 반동의 메커니즘은 ‘사과→반동→한국반발→재사과/재반동’의 형태를 띈다. 다시 말해 무라야마 담화 때처럼 하나의 사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시모토 내각이나 현재 아베 내각처럼 93년의 고노 담화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접근과 같이 특정 시기를 구분 또는 특정 사과를 분절적으로 분석 하는 것은 사과 문제의 연결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사과를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경우 현재 집권중인 내각이기에 자료 접근의 한계성과 연구의 엄밀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킨다. 단,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사과와 반동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아베 내각의 사과와 반동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정권 및 총리의 사과에서 반사과로의 이동, 또는 역으로 반(反)사과에서 사과로의 이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I -5> 역대 정권 및 총리의 사과입장 추이²⁵⁾

	정권 및 총리의 사과 표명			정권 및 총리의 반사과 및 반동	
	특징	내각		내각	특징
제1기 (91-98)	위안부 피해 사과 표명	미야자와 (1991-1993)	↘ ✍		
	고노담화	호소카와 (1993-1994)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1994-1996)			
				하시모토 (1996-1998)	식민지배 정당화, 신사참배
제2기 (98-09)	한일공동선언	오부치 (1998-2000)	↘ ✍		
	오부치 내각 계승	모리 (2000-2001)			
				아베 (2006-2007)	위안부 강제성 부인
제3기 (09-16)	신사참배 거부 표명	하토야마 (2009-2010)	↘	후쿠다 (2007-2008)	‘사과’ 표현 회피
	한일병합100년 간 담화	간 (2010-2011)		아소 (2008-2009)	위안부 강제성 부인, 식민지배 정당화
				노다 (2011-2012)	위안부 ‘성적노예’ 표현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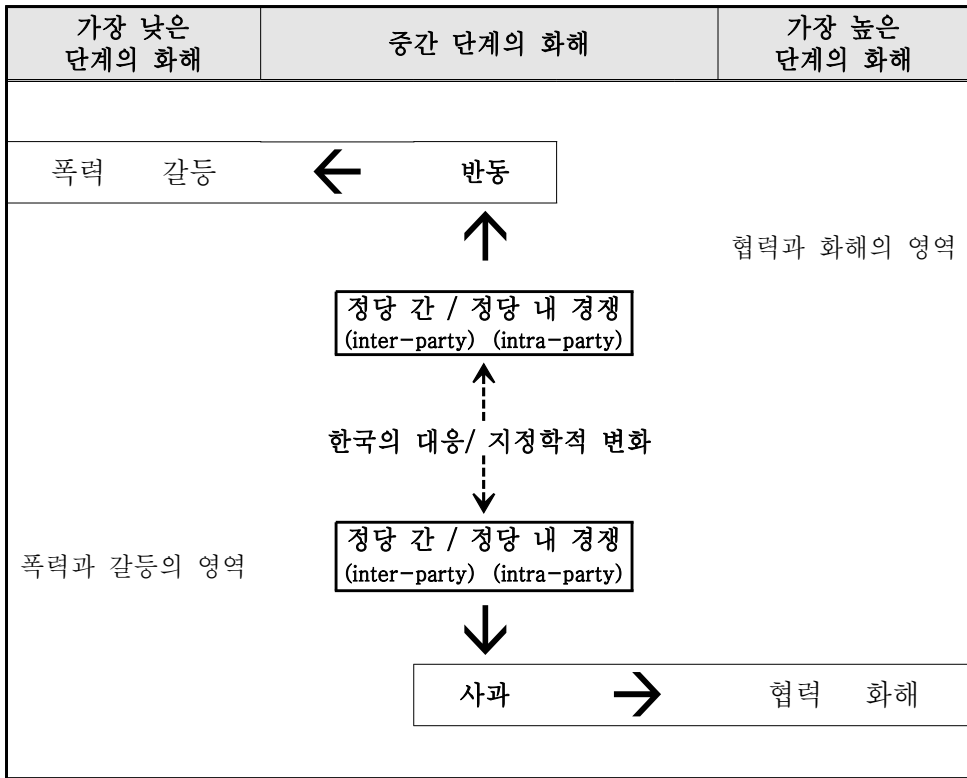
25) 1994년 4월 28일부터 1994년 6월 30일간 집권했던 하타 쓰토무 내각의 경우 집권기간이 짧은 점과 호소카와, 무라야마 총리와 같은 정치적 입장이었던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 분석틀

본 연구는 국내 정치적 반동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국내 정치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하지만 본 독립변수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와 한국변수로 보완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국내 정치적 변화는 각 시기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흐름 속에서 정당 간 경쟁 또는 정당 내 경쟁에서 왜 어떤 정당 또는 파벌(그룹)은 사과 표명을 했는지, 또 반대로 왜 반동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반응 및 대응이 반동의 약화 또는 심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과→반동→한국반발→재사과/재반동’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기본적인 정체성의 노선은 사과 및 반동 발생의 유무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설명적 틀이다. 하지만 이는 반동 발생의 유무나 방식 및 정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한국변수 그리고(또는) 지정학적 변수가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외부 물리적 위협의 증대, 미국의 전략 및 입장, 중국의 부상이 1990년대부터 2010년 때까지 존재하였지만 왜 특정시기에 더욱더 부각되었는지, 또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어떻게 사과와 반동의 약화 또는 심화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반동에 대해 한국은 일관되게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이 표출한 반동의 정도는 상이했다. 이는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정체성의 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왜 특정시기 한국의 대응이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경쟁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반동의 정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표 I -6> 본 연구의 분석틀



[註: ↑ ↓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표시]

II. 사과와 화해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과의 개념

심리학에서 사과에 관한 논의로는 대표적으로 라자르(Lazare)를 들 수 있다. 정신의학자인 라자르는 사과란 일방, 즉 가해한 측이 자기 잘못이나 그가 얻게 된 원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표현함으로써 양측 당사자들이 조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과의 조건으로서는 손상된 자존심과 명예회복,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믿음, 피해자는 잘못 없다는 확인, 미래의 안전에 대한 확신, 가해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상처를 표현할 의미 있는 대화, 복수심의 일부충족을 언급하고 있다. 사과의 단계에 있어서는 첫째, 정직하고 공개적 태도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셋째, 잘못이 벌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넷째,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자르는 사과의 역학을 설명하며 사과란 약자의 언어가 아닌 리더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⁶⁾

사회학에서 사과에 관한 논의로는 고프만(Goffman), 타부치스(Tavuchis), 노블스를 들 수 있다. 고프만의 경우 사과는 개인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아’와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려놓는 자아’라는 두 개의 자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할 수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잘못을 남의 일인 듯 여김으로써 자신을 동정하는 일조의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²⁷⁾ 타부치스(Tavuchis)는 사과란 ‘용서를 구하는 언어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과의 종류를 애매한 사과, 단순한 동정의 사과, 가치와 연계된 사과, 강요된 사과, 남을 대신하는 사과로 구분하고 있다.²⁸⁾ 사과가 자기방어를 위한 변명이나 정당화의 요소를 지니기도 하지

26) Aaron Lazare, *On A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7) Erving Goffman, *Relations in Public* (Transaction Publisher, 2009)

만 사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진정성을 언급하며 사과
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다.²⁹⁾ 마지막으로 노블스의 경우 사과란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인정이라고 설명한다. 사과를 주체, 동기,
자원과 제약으로 구분한다. 사과의 주체는 소수집단, 국가관료, 지식인들
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기의 경우 이성, 감정 그리고 이익으로 구분한다.
이 중 이성과 감정이 사과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결정요소임을 강조한
다. 노블스는 완전하지 못한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³⁰⁾

국제정치학에서 사과에 관한 논의로는 린드, 벤펠, 도즈를 들 수
있다.³¹⁾ 린드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 간의 관계회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³²⁾ 린드는 사
과의 구성요소를 인정과 회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과는 과거의 악행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³³⁾ 또
한 추모의 형태를 4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첫째는 과거 희생자들
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이다. 둘째는 과거 가해자들
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공판이다. 셋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비 건
립, 공휴일 지정의 기념이다. 넷째는 과거 행위에 대한 내용을 책과 교과
서를 통해 전달하는 교육이다. 벤펠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 국내 보수우파
들에 의해 사과가 더 어려워지며 이익집단의 세력화와 과거사 문제의 정
치화, 제도적인 문제들이 사과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³⁴⁾ 도즈의 경우 린드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다.

28) Nicholas Tavuchis, *Mea culpa: A sociology of apology and reconcili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 27.

29) Tavuchis, 1991, p. 36.

30) Melissa Nobles, *The Politics of Official Apolo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27-41.

31) 국제정치학에서 사과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이다.
그 이전에는 심리학, 종교학, 사회학에서 주로 사과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되
었다.

32) Lind, 2009. p 518.

33) Lind, 2011, p.16

34) Benfell, 2002.

도르는 정치적 사과가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사과 없이는 화해로의 길도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⁵⁾

2. 사과의 이론적 단계

기존의 사과에 관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정의와 핵심개념들의 소개로 사과에 관한 연구를 풍성하게 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풍성해질수록 사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담론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과의 개념은 크게 사과의 성격, 주체 및 형식, 방식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과의 성격은 공식적 사과와 비공식적 사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체의 경우, 노블스의 논의와 같이 개인과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사과는 자기 이미지의 방어나 관계회복을 위한 언변의 성격을 지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사과는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준 피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사과를 의미한다.³⁶⁾ 사과의 형식은 크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다수, 다수 대 개인, 다수 대 다수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전자가 가해자 그리고 후자가 피해자이다. 사과의 방식³⁷⁾은 린드의 논의와 같이 관념적인 것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관념적인 것은 과거 악행에 대한 인정과 회한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며 행동적인 것은 국가 차원의 보상, 법적 공판, 기념,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형성하기 위해 본 글은 사과를 가장 낮은 단계의 사과, 중간단계의 사과,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35) Dodds, 2003. p. 185.

36) Jason Edwards, "Community Focused apology in International Affairs: Japanese Prime Minister Tomichi Murayama's Apology,"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6 (2005); Lazare, 2004.

37) 형식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의미하며 방식은 구체적인 이행방식을 의미한다.

사과로 구분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사과는 ‘비공식적으로 개인 대 개인
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표현’이다. 중간단계의
사과는 ‘공식적으로 개인 대 다수/ 다수 대 개인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
에 대한 인정, 이에 대한 회한과 표현’이다. 즉 행동적 방식으로의 이행
은 포함되지 않은 관념적 방식만 포함하는 형태의 사과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는 ‘공식적으로 다수 대 다수의 차원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회한의 표현을 함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보상, 법적 공
판, 기념, 교육과 같은 방식의 행동으로 이행’하는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Ⅱ-1> 와 같다.

<표Ⅱ-1> 사과의 구성요소와 단계

단계	성격	주체 및 형식	방식	
			관념적	행동적
가장 낮은 단계	비공식	개인 대 개인	인정, 표현	X
중간단계	공식	개인 대 다수	인정, 회한, 표현	X
		다수 대 개인		
가장 높은 단계	공식	다수 대 다수	인정, 회한, 표현	보상, 공판, 기념, 교육

[출처: Nobles, 2010; Lind, 2009, 천자현, 2013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3. 화해의 개념

사과의 개념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은 바로 화해(reconciliation)의 개념
이다. 전술하였듯이 화해의 개념은 사과와 유사하게 단어의 추상성과 범
위의 모호성으로 직관적이나 개념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사과와는
반대로 화해에 관한 연구는 국제정치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졌
다.³⁸⁾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화해에 관한 정의, 화해를 위한 조건 그리고

38) Bar-Siman-Tov, Yaacov, 2004; Friedrich Kratochwil, *Rules, norms, and decisions: on the conditions of practical and legal reaso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affai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화해의 종류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해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노블스는 화해란 특정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최소한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존재하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즉 과거의 일에 대한 감정적 공유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³⁹⁾ 다시 말해 개인간, 집단간 그리고 국가 간의 적대심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필립스(Philips)는 개인 간의 화해에 있어서는 우정과 조화 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⁴⁰⁾ 반면 크리스버그(Kriesberg)는 과거 적대 관계의 두 그룹이 회유적인 협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화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마오즈(Maoz)는 상호 협조를 기반으로 보다 평화적인 관계로 변화할 준비가 된 상태를 화해로 정의하고 있다.⁴¹⁾ 에커만(Ackermann)과 펠드만(Feldman)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해는 갈등해결을 통해 라이벌 관계에서 우정과 화합의 관계로의 정체성의 변화, 적대와 분노의 감정을 조화의 감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⁴²⁾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1997); Raymond, 2004, pp. 177-196; Elazar Barkan and Alexander Karn, (eds.), *Taking wrongs seriously: apologies and reconcili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Bar-Tal, Daniel and Gemma H. Bennink,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Bar-Siman-Tov, Yaacov, 2004, pp. 11-38; Maoz, Ifat. "Does contact work in protracted asymmetrical conflict? Appraising 20 years of reconciliation-aimed encounters between Israeli Jews and Palestinia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8, No. 1 (2011), pp. 115-125.

39) Nobles, 2010, pp. 30-34.

40) Ann L. Philips,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German Politics*, Vol. 7, No. 2 (1998), pp. 64-85.

41) 크리스버그와 마오즈는 화해가 연속적인 것이며 그 '정도(degree)'를 갖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화해의 존재여부 보단 정도를 봐야한다는 의미이다.

42) Alice Ackermann, "Reconciliation as a Peace-Building Process in Post-War Europe: The France-German Case," *Peace & Change*, Vol. 19, No. 3 (1994), pp. 229-250; Lily Felma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Reconciliation in German Foreign Policy: Relations with France, Ireland,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2 (1999), pp. 333-356.

화해의 정의에 있어 그 미사여구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악한 과거의 감정이 사과를 통해 완화되는 과정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화해의 조건에 대한 국제정치학에서의 논의는 켈만(Kelman)을 들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성공적인 사과의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켈만은 화해의 전제조건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 첫째는 상대국의 주권과 권리의 인정과 더불어 국민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이는 상대국의 영토와 국가로서의 적법성의 인정을 의미한다. 둘째, 양국이 상호 존중,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의 구축이다. 이는 나치즘이나 분리정책과 같은 배타성을 내포하는 도덕성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하여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도덕성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셋째, 역사를 직면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직면을 통해 양국이 역사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의 역사적 합의는 하나의 공통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켈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합의는 양국이 상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책임의 인정이다. 화해는 과거 잘못에 대한 양국의 수용을 구한다. 다섯째,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확립이다. 상호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적인 기반 없이 양국은 화해의 길로 들어설 수 없음을 지적하며 건설적 갈등조정 및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⁴³⁾

마지막으로 화해의 형태에 대해서 빌라-비센치오(Charles Vila-Vicencio)는 낮은 수준의 화해와 높은 수준의 화해로 구분한다. 낮은 수준의 화해는 평화적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고 적대자들이 함께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반면에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화해는 공존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과 악감정으로 인해 현재의 정치적 관계를 와해시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화해는 관계 회복과 신뢰 형성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집단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⁴⁴⁾ 크로커(Crocker)의 경우

43) Herbert Kelman, "Reconciliation as Identity Chang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Yaacov Bar-Siman-Tov, 2004, pp. 111-124.

44) Charles Vila-Vicencio et al. (eds.), *Looking Back, Reaching Forward*:

화해를 ‘얇은(thinner)’ 것에서 ‘두꺼운(thicker)’ 것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분하며 초기에는 단순한 공존에 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개별 국가와 개별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⁴⁵⁾

반면 로스(Ross)는 강한 형태의 화해와 약한 형태의 화해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과거의 적국 관계가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적대국간의 상호교류가 건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폭력행위의 종결이 수반되는 충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⁶⁾ 화해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천자현을 들 수 있다. 천자현의 경우 화해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며 화해의 종류를 절차적 화해, 물질적 화해, 관념적 화해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화해를 ‘과정’ 이라고 정의하는데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 이유는 화해가 갈등과 평화구축을 이어주는 정치 과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화해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⁷⁾

4. 화해의 이론적 단계

화해에 관한 기존연구도 사과에 관한 연구들과 흡사하게 다양한 정의와 핵심개념들의 소개로 인해 화해에 관한 연구를 풍성하게 하였지만 이 역시 기존의 화해 담론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화해에 관한 연구 역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담론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화해의 개념은 화해의 주체, 형식 그리고 정도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해의 주체는 켈만의 논의에

Reflections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CapeTown and London, 2000), p. 28.

45) David Croker,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1999), p. 60.

46) Ross, 2004, p. 200.

47) 천자현, 2013, p. 14-15.

따라 화해를 요청하는 가해국과 화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국, 즉 두 주체가 수반된다. 화해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천자현의 논의를 수정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화해, 경제 협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과 청구권 지급의 물질적 화해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관념적 화해로 구분할 수 있다.⁴⁸⁾ 정도의 측면에서는 크로커와 빌라-비센치오의 논의에 따라 폭력과 살해 위협이 없어지며 적국과 함께 거리를 걸을 수 있는⁴⁹⁾ 형태와 서로를 개별 국가와 개별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형성하기 위해 본 글은 화해를 가장 낮은 단계의 화해, 중간 단계의 화해,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로 구분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화해는 ‘피해국이 가해국의 사과를 수용, 이를 토대로 제도적 화해를 이루어 폭력 또는 살해위협이 부재한 상태’이다. 중간 단계의 화해는 ‘피해국이 가해국의 사과를 수용, 이를 토대로 제도적 및 물질적 화해를 이루어 두 국가가 특정 사안들에 대해 협조 또는 협력할 수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의 협조 또는 협력은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와해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는 ‘피해국이 가해국의 사과를 수용, 이를 토대로 제도적, 물질적, 관념적 화해를 이루어 서로를 인정 및 존중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Ⅱ-2> 과 같다.

48) 이 3가지 화해는 꼭 단계적(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순서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후 독불관계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1월 엘리제 조약을 체결한다. 이는 두 국가의 화해협력 조약인데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1963년 이후로 두 국가의 물질적 및 관념적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서가 지적했듯이 1950년대로 넘어오면서 프랑스에게 독일은 ‘우방국은 아닌 독일(no friend but Germany)’의 상태로 변경되었고 1965년에는 ‘프랑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 관계가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엘리제 조약 체결 이전부터 두 국가의 관념적 화해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의 3단계가 꼭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49) Charles Vila-Vicencio et al, 2000. p. 28; Croker, 1999.

<표Ⅱ-2> 화해의 구성요소와 단계

단계	형식	정도
가장 낮은 단계	제도적 화해	폭력, 살해위협을 부재
중간단계	제도적 화해	특정 사안들에 대한 협조 또는 협력 가능
	물질적 화해	
가장 높은 단계	제도적 화해	서로를 인정·존중하고 비전 공유
	물질적 화해	
	관념적 화해	

[출처: Charles Vila-Vicencio, 2000; Croker, 1999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5. 사과와 화해의 이론적 종합과 현재 한일관계에의 적용

1) 사과와 화해의 이론적 종합

기존 연구를 통해 사과와 화해의 두 개념을 종합해보면 사과에서 화해로의 단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해국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이며 두 번째는 가해국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한과 사과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가해국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피해국의 평가, 수용 그리고 용서의 3단계를 요약할 수 있다. 단계적 진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가해국의 일관적인 태도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는 진정성과 진실성의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는 단계적 퇴행(reverse) 또는 분산(disperse)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Ⅱ-3> 와 같다.

<표Ⅱ-3> 사과와 화해의 단계

단계	형태	행위자
1 단계	가해국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	일본
2 단계	가해국의 잘못에 대한 깊은 회한과 사과	일본
3 단계	피해국의 반성과 사과에 대한 평가, 용서와 수용	한국

위 세 가지 단계는 이론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각 단계는 순서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각 단계사이에는 엄청난 정치적 긴장과 마찰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과와 화해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와 종합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과는 일방향의 게임이지만 화해는 양방향의 게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과의 표명은 한 국가의 정치적 계산을 통해 표출되지만 화해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용국가가 사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따라서 사과를 하는 국가에 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를 평가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국가에 관한 분석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레데라(Lederach)는 ‘화해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만날 수 있는 중간지점이다. 중간지점으로서의 화해는 과거에 대한 인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공유의 장이며 이는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⁰⁾ 따라서 사과와 화해의 동학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일관계에서의 과거에 대한 사과문제는 미래 양국관계의 정체성의 변화와 관계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2) 현재 한일관계에의 적용: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한국이 요구하는 사과의 형태는 ‘공식적으로 다수 대 다수의 형식으로써 관념적 및 행동적 방식을 포함한 형태의 사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이다.⁵¹⁾ 사과의 주체로서 일본 국민 전체가 사과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총리 또는 내각 차원에서 그 다수를 대표하는 형태를 띤다. 사과의 대상은 침략 및 식민지배

50) John Paul Lederach, "Beyond Violence: Building Sustainable Peace." In E. Weiner (eds.), *The Handbook of Interethnic Coexistence*, (New York: Continuum, 1988), pp. 236-245.

51) 정대협은 다음 7가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국회결의사죄, 4. 법적배상, 5. 역사교과서 기록, 6.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공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general/general.nx?page_str_menu=0101 (검색일: 2016년 4월 3일)

문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 또는 대통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며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아닌 피해자에게 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이 1991년부터 표명한 사과들은 중간단계의 사과와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야자와, 호소카와 총리의 사과는 중간단계의 사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무라야마, 오부치, 간 총리의 사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로 분류할 수 있다.⁵²⁾

화해의 경우, 중간단계의 화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중간 단계의 화해란 ‘피해국이 가해국의 사과를 수용, 이를 토대로 제도적 및 물질적 화해를 이루어 두 국가가 특정 사안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의 수용이란,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선포 및 공표의 형태가 아니라, 일본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관계가 좋아지는 형태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⁵³⁾ 한일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통해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화해를 이루었고, 경제 협력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과 청구권 지급의 물질적 화해의 진행과정에 있다. 하지만 김대중-오부치 정권의 관계와 같이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를 이루고자 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 이를 현재의 한일관계를 대입해보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위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기조차 어렵다. 즉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 이를 적용해보니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론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극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물론 무라야마, 오부치, 간 총리의 사과가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관념적(인정, 회한, 사과표현) 및 행동적 요소(일부충족: 예를 들면, 보상)들을 포함한 사과를 표명하였다. 일본 사과의 수학적 분석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Chun, 2015, pp. 249-269을 참조.

53) 대표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과거 악행에 대한 인정 여부의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 악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주장하는 사과지지 세력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과거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반(反)사과세력으로 분리된다. 두 세력 간 의견 불일치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반복된 인정과 부인의 역사를 반복해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단계인 ‘인정’ 여부의 성립조차 판단할 수 없다.

둘째, 깊은 회한과 이에 대한 사과 표현의 문제이다. 대표적 사과 표현으로 1993년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오부치 사과를 들 수 있다. 위의 사과들은 일본의 깊은 회한과 사과를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무라야마 총리와 오부치 총리의 사과는 다수(총리가 국민을 대표) 대 다수(대통령이 국민을 대표)의 형태를 띠었다. 이는 인정, 회한, 표현을 포함한 관념적 방식과 기념을 포함한 행동적 방식을 띤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하시모토,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 노다, 그리고 현재의 아베 내각을 거치면서 총리들은 사과의 뜻을 거부하였고 반사과세력들의 연맹들 또한 증가하였다. 심지어 아베의 경우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⁵⁴⁾ 전술하였듯이 국가 간 정치적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관성이다. 일관성이 결여된 사과는 각 단계를 퇴행 또는 분산시킬 수 있다. 가해국(자)이 피해국(자)에게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해국(자)의 진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데, <표1-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반동으로 인한 일본의 비일관된 사과는 기존의 사과들의 진정성마저 저해시키며 이는 한국의 끊임없는 재(再)사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과 피로도(apology fatigue)를 일으키게 된다.⁵⁵⁾

54) 「연합뉴스」, 2012년 8월 28일.

55) 2014년 동아시아연구원과 Genron NPO의 설문조사 중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의 73.9%가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1110181300&category=24&code=kor_report&idx=13070 (검색일: 2016년 4월 7일)

일본의 깊은 회한과 이에 대한 사과의 표현 역시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화해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위안부 문제 대응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비록 과거사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각 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하였다. 기존 정권들의 상이한 대응 태도는 사과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오부치 총리와의 공동선언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대협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임기 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실리 외교를 추구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루었으나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하였다. 이렇듯 한국 정부 역시 합의된 사과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했으며 이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한국 정부와 실질적 사과대상인 정대협의 의견 불일치이다. 역대 정부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사과대상인 피해자들과의 입장이 상이했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정부배상’을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김대중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⁵⁶⁾ 노무현 정부는 정대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⁵⁷⁾ 이명박 정부의 경우, 권철현 주일대사가 “과거사보

56) 1998년 4월, 정대협과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정대협의 입장을 받아들여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을 거부하였다. 「한겨레」, 1998년 4월 15일.

57) “정대협은 이에 앞서 18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자료공개,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청구권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의 해결 방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2005년 1월 19일.

다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발언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고 언급했다.⁵⁸⁾ 박근혜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협상’ 을 타결하였지만 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대협을 배제한 채 진행함으로써 더 큰 반발에 부딪혔다.⁵⁹⁾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게임이다. 하지만 정대협과 한국정부가 서로 다른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다중신호를 보내는 결과가 나타난다. 가해국(일본)과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정부(한국)의 3각 구도, 심지어 국민들의 여론까지 분열되어 4각 구도의 게임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다중신호(multiple signaling)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사과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으며 역으로 일본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피해갈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

<표 II-4> 역대 한국정부와 정대협의 의견 일치여부

	정대협			정부			결과
	인정	사과	배상	인정	사과	배상	
김영삼	○	○	○	○	○	×	불일치
김대중	○	○	○	○	○	△	불일치
노무현	○	○	○	○	○	△	불일치
이명박	○	○	○	△	△	△	불일치
박근혜	○	○	○	○	○	△	불일치

[출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1991-2016)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따라서 사과와 화해의 단계를 평가해보면 현재 한일관계는 어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적 교착상태’가 아니라 각 단계에서 마저 여러 양상이 나타나는 ‘단계적 분산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단계적 분산상태는 분석의 출발점 설정마저 어렵게 한다. 본 글은 단계적 분산상태의 근본적 원인을 2세대 사과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반(反)사과적 움직임인 반동에 있다고 본다.

이하 III장부터 V장까지는 각 시기마다 일본의 정당 간/ 정당 내

58)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경향신문」, 2008년 12월 31일.

59) 또한 정권 초기부터 일본의 반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정대협으로부터 비판 및 공개질의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 「한국일보」, 2013년 5월 1일.

경쟁과 이를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적 상황과 한국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과 또는 반동이 왜 발생했는지 또 왜 약화 또는 심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Ⅲ. 제1기: 보수와 혁신의 대립: 사과와 반동의 서막 (1991-1998)

1. 사과외교의 등장: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 (1991-1996)

미국은 전후 일본의 국가적 구조 개혁의 방향을 ‘민주적이지만 약한 일본’으로 설정하였다. 천황제를 폐지하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없는 일본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합국의 개혁은 1948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전환을 겪게 된다. 새로운 냉전의 전개로 미국은 ‘민주적이지만 약한 일본’에서 소련의 부상과 공산세력의 결집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의 부활로 개혁의 방향을 선회하는 소위 역코스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전쟁책임론을 두고 보수와 혁신세력들이 대립하게 되는 양상을 낳기도 하였다. 보수 세력의 경우 전전(戰前)일본의 모든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반면 혁신 세력의 경우 일본의 전쟁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평화주의 국가노선을 강조하였다. 두 세력의 갈등은 1962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두고 가시화되었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은 미군의 배치와 일본 기지 사용 시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의 내용을 담은 미일신(新)안보조약을 타결했다. 이에 반해 혁신세력은 공산당과의 합작을 통해 ‘안보조약 개정 저지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격렬히 반대했다. 1950년과 1960년을 거치면서 보수와 혁신세력들은 일본의 노선에 있어 지속적으로 대립하였고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를 양극화를 고착시켰다. 아래 <표Ⅲ-1>은 1990년대 이전 보수와 혁신의 양극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표Ⅲ-1> 역대 총선에서의 보수와 혁신의 의석수 및 득표율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공산당	기타	무소속	보수 득표율	혁신 득표율
1967	277	140	25	30	5	0	9	48.80	45.42
1969	288	90	47	31	14	0	16	47.63	46.89
1972	271	118	29	19	38	2	14	46.85	47.83
1976	249	123	55	29	17	17	21	41.78	48.26
1979	248	107	57	35	39	6	19	44.59	47.37
1980	284	107	33	32	29	15	11	47.88	45.46
1983	250	112	58	38	26	11	16	45.76	46.89
1986	300	85	56	26	26	10	9	49.42	42.72
1990	275	136	45	14	16	5	21	46.11	46.57

[출처: 石川眞澄, 戦後政治史. (東京: 岩波書店, 1995)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⁶⁰⁾

1990년대의 탈냉전기과 함께 동아시아는 몇 가지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중 일본을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적 변화는 크게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의 선택’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사회적 변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구도를 소멸시켰다. 공산주의 진영의 몰락은 중국의 민족주의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한국의 반공주의 정체성 역시 소멸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쇼와 천황의 죽음,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본의 새로운 국제적 위치 구축, 경제 침체라는 큰 사건들을 맞이하게 된다. 급격한 비틀림으로 인한 간극을 채워줄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었고 이는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의 설정으로 귀결되었다. 일국평화주의를 추구하던 일본은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제평화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⁶¹⁾

둘째, 한중일의 국내사회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치형태의 등장이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정

60)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 114의 자료를 재인용.

61) 한상일, “비틀린 전후사와 사죄의 주체-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한 양상,” 『계간 사회비평』, Vol. 22, (1999), pp. 113-131.

치참여는 두 국가의 정치구도를 변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처럼 국가가 정보를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및 기술적 변화는 국가가 민의를 적극 수렴 및 반영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외교의 구도가 각 국의 정부만 참여하던 양자게임에서 각 국의 이익집단(시민단체)과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3자 또는 4자 구도의 게임으로 바뀌게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⁶²⁾ 따라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선 주변국들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결국 한일의 사회적 변화는 두 국가의 상호접촉 빈도를 증가시켰고 이는 일본이 주변국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표명, 동시에 갈등의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정치적 배경을 제공하였다.⁶³⁾

위와 같은 국제 및 지역적 변화 속 1991년 11월 미야자와 내각이 출범했다. 미야자와 내각의 사과외교의 배경에는 ‘국제협력법안(PKO)의 통과’와 ‘위안부 문제의 쟁점화’를 들 수 있다. 1991년 1월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걸프전이 일어났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다국적군 형성을 준비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가이후(海部俊樹) 수상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평화헌법상 인적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⁶⁴⁾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130억불(약 15조)에 달하는 전비를 부담하였다. 심지어 PKO법안의 국회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91년 1월 24일 자위대 수송기를 걸프만 지역에, 4월 24일에는 해상 자위대 소해정을 걸프전에 파견하기도 하였다.⁶⁵⁾

62) 일본은 1990년 5.57%, 1991년 3.32%, 1992년 0.82%, 1993년 0.17%, 1994년 0.86%, 1995년 1.94%, 1996년 2.61%, 1997년 1.6%, 1998년 -2%, 1999년 -.02%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country/japan> (검색일: 2016년 4월 5일)

63) Hasegawa and Togo, 2008, pp. 1-4.

64) 박철휘, 2011. p. 232.

65) 박철휘, 2011, pp. 231-232.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적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웨이트가 자국을 도와준 참전국들에게 감사 표시를 한 32개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⁶⁶⁾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표 발행식 외교’ 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인적공헌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일본만의 일국평화주의가 아닌 국제평화주의로 외교노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⁷⁾ 하지만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은 국내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두려움을 야기했다.

이에 중국의 강택민(江澤民) 총서기는 일본 정부의 재군사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신중히 대처하도록 촉구했다.⁶⁸⁾ 또한 1992년 4월 일본 방문 당시 ‘국제정세와 중일관계’ 라는 강연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를 통해 중국 인민이 큰 재난을 겪었으며 (...) 이 같은 일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⁶⁹⁾ 한국 역시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장차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자위대 해외파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며 “우리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과거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려를 재삼 표명한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⁷⁰⁾

이러던 와중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된 사건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1990년 이전 수면 아래 있다가 1990년 1월 윤정옥 교수의 위안부 생활에 대한 한겨레신문 취재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같은 해 6월 6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의원의 위안부의 존재여부에 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발표한다. 노동성 직업안전국장은 “중군위안부라는 사람에 대해

66) 김문규, “PKO협력법 제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 『정세연구』 Vol. 35, (1992), p. 49.

67) 박철희, 2011, p. 233.

68) 「동아일보」, 1992년 1월 12일.

69) 「경향신문」, 1992년 4월 9일.

70) 「경향신문」, 1992년 12월 4일.

옛 사람들의 이야기 등도 종합해서 들어 보면 역시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등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1991년 12월 6일, 동경지방법판소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은 “정부 관계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 대처하기 곤란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⁷¹⁾ 이에 노태우 대통령과 정대협은 1992년 1월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일본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1991년 12월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대응에서 주지할 점은 정부와 정대협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차기 정부들의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다중신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였고 정부와 정대협의 신호를 일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던 1992년 1월 11일, 일본의 주오대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공문서를 발견하였고 이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다. 국제사회와 한국, 일본 국내의 악화된 여론, 심지어 국내 기관의 공문서 발견은 일본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만들었다.⁷²⁾ 이는 이틀 뒤, 1992년 1월 13일 가토 코이치(加藤紘一) 관방장관, 1992년 1월 17일 미야자와 총리의 사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대협은 ‘진상규명과 보상 없는 말뿐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을 밝혔고 미야자와 총리는 이를 수용하여 진상규명을 지시하였다.⁷³⁾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내부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군의 개입과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재(再)사과를 표명한 ‘고노담화’를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정대협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노력했다.⁷⁴⁾

71)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htruth.org/know/know_04.htm (검색일: 2016년 2월 13일)

72) Yamazaki, 2012, pp. 62.

73) Yamazaki, 2012, pp. 62-63.

74)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1992. 7
http://www.truethtruth.org/data/data_03.htm (검색일: 2016년 2월 13일)

사과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호소카와 내각에도 지속되었다. 1993년 7월 실시된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민당에서 탈당한 신생당, 일본신당과 같은 새 보수신당들의 약진, 사회당의 참패 그리고 38년 만에 자민당이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오자와⁷⁵⁾의 탈당과 자민당의 내부분열은 소위 일컫는 ‘55년 체제의 종언’을 야기했고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정당들은 연립상대를 찾아 나섰다. 그 결과 일본신당, 신생당, 사회당을 포함한 8개당이 ‘비자민·비공산’ 연립정권을 구성함으로써 호소카와 내각이 출범했다.

<표Ⅲ-2>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정당명	당선자수	선거이전	대비
자민당	223	222	+1
사회당	70	136	-66
신생당	55	36	+19
공명당	51	45	+6
공산당	15	16	-1
일본신당	35	0	+35
민사당	15	14	+1
사민련	4	4	0

[출처: 「毎日新聞社」, 1993년 7월 18일]

호소카와 내각의 사과 움직임의 배경에는 ‘기존 정권과의 차별’과 ‘사회당과의 연대의 필요’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신당 출신의 호소카 총리로서는 새로운 정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다. 일본은 38년 만에 여당 지위를 잃은 자민당과 새로 출범한 연립정권으로 인해 형성될 새로운 정치 지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부풀어

75)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은 일본은 국력에 맞게 국제 공헌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다른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베스트팔렌적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헌법적 제약으로 안전보장정책에 자율성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에 대해 사회당은 가장 격렬히 반대했으며 이들은 여전히 평화주의, 비군사주의를 강조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철휘, 2011 참조.

있었다.⁷⁶⁾ 성립 직후 마이니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소카와 내각은 75%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⁷⁷⁾ 야마자키가 지적하듯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 즉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기에 좋은 전략이 바로 과거사 인식의 문제이다.⁷⁸⁾ 호소카와 내각은 바로 이 전략을 선택했다. 내각 출범 직후인 8월, 호소카와 수상은 내각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전쟁의 책임과 관련해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 틀림없는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 정권들의 과거사 인식과는 명확한 차별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⁷⁹⁾ 이는 연립정권 출범 당시 조인된 ‘연립정권 수립에 관한 합의사항’의 4번째 항목에서 “넷째,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의 자세로 세계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⁰⁾

둘째, 사회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호소카와 내각의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쌀 시장 개방, 국민복지세 조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요 정치 문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내 과반수 확보가 중요했다. 이는 곧 ‘비자민·비공산’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하는 명분을 만들었고 당시 비자민·비공산 세력들 중 77석이라는 가장 큰 의석수를 차지한 당이 바로 사회당이었다. 실제 호소카와 총리는 쌀 시장 개방에 있어 사회당의 당론결정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국민복지세 조율 과정에서 사회당의 강한 반발로 연정이 붕괴될 위험을 겪기도 하였다.⁸¹⁾ 그만큼 사회당과의 관계는 중요하였다.

이는 사회당과의 안정적 연대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사회당이 오

76) Yamazaki, 2012, p. 71.

77) 「毎日新聞社」, 1993년 8월 12일.

78) Yamazaki, 2012, p. 72.

79) 김현우, 『일본현대정치사』(아카넷, 2004), p. 556; Yamazaki, 2012, p. 88. Norma Field, “The Stakes of Apology,” *Japan Quarterly*, Vol. 42, (1995), pp. 405-418; Yoshida Takashi, “History Textbooks: For Whom and for What Purpose?,” *Asian Studies Newsletter*, (2000), pp. 13-14.

80) 오노 고지, 이기완 옮김, 『일본 현대 정치사: 1945-1998』, (케이시, 2003), pp. 231-232.

81) 「중앙일보」, 1993년 12월 14일; 「중앙일보」, 1994년 2월 4일.

래 추구해온 반성과 사과의 노선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줄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였다. 이에 호소카와 총리는 1993년 8월 10일, 8월 15일, 8월 23일, 그리고 11월 7일에 걸쳐 총 4차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호소카와 총리의 사과에 대해 자민당 대표들과 일본 유족회 회원들은 거센 반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닛케이신문, 1993년 8월 15일 사설에서 호소카와 총리를 질책하였다. 이러한 사과물결에 대하여 “지금 일본에는 ‘사죄병’이라는 위험한 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⁸²⁾ 이는 미야자와 총리 때부터 이어져 온 사과외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과요구에 대한 불만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호소카와 내각의 하타 외무장관까지 “이 정도로 지나칠 줄 몰랐다.”며 항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반동을 고려해 호소카와 총리는 향후 ‘침략전쟁(侵略戦争)’을 ‘침략행위(侵略行爲)’로 정정하기도 하였다.⁸³⁾

호소카와 내각의 사과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움직임에 대해 “두 나라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국제질서가 탄생하는 이 시기에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언급함으로써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⁸⁴⁾ 심지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⁸⁵⁾ 이에 일본 정부는 “양국간의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이미 매듭지어졌다는 일 정부의 입장에 배려를 보인 것으로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김 대통령의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호감을 보이기도 하였다.⁸⁶⁾ 이로써 적어도 양국의 정부는 화해의 단계에 있어 중간 단계의

82) 「경향신문」, 1993년 8월 12일; 석주희, “일본의 공식사과와 국가 사회관계: 무라야마 담화를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2014.

83) 전자의 경우 전쟁 자체를 침략행위로 규정하지만 후자의 경우 전쟁 중 발생한 몇몇 불법적인 행위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Yamazaki, 2012, p. 88.

84) 「경향신문」, 1993년 11월 7일.

85) 「동아일보」, 1993년 3월 13일.

케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는 오히려 향후 한일관계의 소용돌이의 출발점을 제공했다. II장에서 살펴본 듯이, 이론적으로 피해에 대한 사과와 용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역이다. 즉 위안부 문제에 있어 주체는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이여만 한다. 하지만 물질적 보상을 강조한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와 정대협이 단일신호(single signaling)로 인해 유지될 수 있었던 양자구도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두 행위자의 의견불일치 문제는 다중신호 문제로 이어졌고 이는 사과의 대상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문제를 오히려 양자에서 3자 구도로 확장시킴으로써 사과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비록 양국 정부는 중간 단계의 화해를 이루었는지 몰라도 한국과 일본의 화해는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6월 물과 기름과 같았던 자민과 사회당의 연립정권인 무라야마 내각이 탄생했다. 무라야마 내각 역시 이전 두 정권의 사과 움직임에 계승하고자 했다. 오히려 사과 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렬했다.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강화 움직임으로의 배경에는 ‘사회당 출신 총리로서의 정체성’과 ‘보수 리버럴 자민당과의 연립’을 들 수 있다.

일본 역사상 과거사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는 1995년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제50차 회의에서 “중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개별 피해 국가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무라야마 내각은 정부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전후 역사인식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중전 50년 결의’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총리와 정부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를 표명하고자 했다. 하지

86) 「경향신문」, 1993년 3월 15일.

만 이는 보수 우파와 신진당으로 대표되는 반사과세력들의 거센 반동에 부딪혔고 채택문제는 난항을 겪게 되었다. 사회당이 추진하는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부전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終戰50周年国会議員連盟),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 연맹(正しい歴史を伝える国会議員連盟)을 결성하였다. 결국 1995년 6월 9일 ‘종전 50년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사과’라는 표현이 빠진 채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결의안으로 마무리 되었다. 무라야마 총리가 추진한 국회차원에서의 결의는 오히려 보수와 혁신세력들의 과거사에 대한 대립을 명확히 고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과 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했던 무라야마 ‘종전 50주년 결의’는 오히려 한국 내부의 항의⁸⁷⁾와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비판에 직면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항의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를 통해 인정, 반성, 사과, 부전을 주장해 온 사회당의 정체성과 이를 대표하는 당수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했다. 비록 정부차원의 배상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과표명을 통해 평화주의 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⁸⁸⁾

무라야마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담은 담화가 발표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당시 자민당의 집행부의 구성과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집행부 구성의 경우, 당시 자민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고노 총재와 가토 고이치 정조회장 등 보수리버럴로 대표되는 헤이세이정책연구회의 핵심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정권을 되찾기 위해 사회당과의 연대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미일동맹 반대와 자위대 반대노선을 포기한 사회당의 동아시아 외교노선을 반대하지 않는 현실적인

87) 이에 대해 류광석 외무부대변인은 “국회 결의 채택과정에서 일본 내에 아직도 과거의 행위를 분명히 반성하지 않는 등 역사인식에 노정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1995년 6월 11일.

88) 이에 한국 정부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백한 인정과 ‘사과’를 환영했으나 후속조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내보였다. 「경향신문」, 1995년 8월 16일.

선택을 하였다. 한마디로 ‘미일동맹 반대와 자위대 반대노선의 포기’와 ‘사과외교’를 맞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⁸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동이 일어났다.⁹⁰⁾ 자민당 내 반사과세력들(세이화)은 사회당의 역사 문제 처리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토로하면서 ‘역사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문부상은 무라야마의 사과 움직임에 대해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과는 자학사관 또는 사죄사관에 기반을 둔 굴욕외교” 이기에 일본의 긍지와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에토 타카미(江藤隆美) 장관은 “무라야마의 총리의 사과는 틀렸으며 식민지 시기 일본의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⁹¹⁾ 세이화정책연구회로 대표되는 영향력이 강한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한 사과 반대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대처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시기의 일본의 정책에 대한 합리화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에토 장관의 망언에 반발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심지어 며칠 뒤 예정되어 있던 한일 정상회담의 취소 의사를 밝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노 요헤이 외무장관을 파견하여 사과하고자 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양국관계는 경색되고 말았다. 결국 에토 장관은 사임하였고 무라야마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에토 장관의 망언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다.⁹²⁾ 비록 국내정치적으로 관념적 및 행동적 반동이 발생하였지만 무라야마 내각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시정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관념적 반동들에 대해서는 ‘발언→한일 언론보도→한국 정부 유감 표명/ 일본 야당 파면 요구→발언 철회 후 사임/ 발언 철회 거부 후 파면’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⁹³⁾ 이를 통해 무라야마 내각은 사과 움직임을 일관성과 지속

89) 박철휘, 2011, p. 275.

90) Park, Cheol Hee, “Political Dynamics of Regime Transformation in Japan in the 1990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 No. 2, (November, 2004), pp. 311-322.

91) 「경향신문」, 1995년 11월 13일.

92) 「한겨레」, 1995년 11월 14일.

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무라야마 내각은 중간 단계의 화해의 안정화를 넘어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로 그 단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표Ⅲ-3> 관념적 반동에 대한 무라야마 내각의 시정조치

발언자	발언 요지	파면·사임 경위
94. 8. 12. 사쿠라이 (환경청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침략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님, 일본만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아시아는 그 덕분에 유럽의 식민지로부터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 취소(8.12) · 한국 외무부 논평 발표 (8.13) · 일본대사 대리 초지(8.13) · 사임(8.14)
95. 11. 7. 에토 (총무청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시대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음. · 한일합방이 무효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국제협정은 성립되지 않음. · 창씨개명을 모든 국민에게 강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 취소(11.8) ·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11.8) · 일본대사초치(11.9~11.10) 주일대사, 일본 외무사무·차관 항의 방문 · 중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판(11.13) · 무라야마 총리 사임요구 거부 · 야당이 사임 결의안 제출, 자민당 총재 사임 권고(11.13) · 사임(11.13)

[출처: 남상구. 2015, pp. 399]

93) 남상구,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편, 『한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 (역사공간, 2015), pp. 399.

2. 혁신세력의 위기와 반동의 시작: 하시모토 내각 (1996-1998)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내각의 등장과 함께 일본의 사과외교는 반동으로의 전환을 겪게 된다. 1996년 1월 11일, 출범한 당일 저녁 하시모토 수상은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평화주의 노선을 채택’ 한다고⁹⁴⁾ 선언하였지만 약 2주 뒤, 태평양 전쟁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해 “경위가 복잡해 목적과 성격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발언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⁹⁵⁾ 정치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일관되게 반성과 사과의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하시모토 내각은 어떻게 이전 내각들과 달리 반동으로 외교노선을 전환할 수 있었는가? 하시모토 내각 출범 당시정치지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당의 ‘이념적’ 붕괴를 들 수 있다. 사회당은 창당 이래 꾸준히 미일동맹과 자위대 반대를 전략적 노선으로 택해왔다. 하지만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가 총리가 되는 순간 현실적 측면에서 미일동맹을 반대할 수 없었고 자위대의 총사령관이 자위대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따라서 사회당은 오랫동안 지켜온 이념 및 정책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념적 붕괴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일본 정당 간 냉전적 대립해소의 출발점이었지만 반대로 반사과세력들을 견제할 혁신세력의 붕괴의 출발점이기도 했다.⁹⁶⁾

94)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archive_3/rh_1st_state.html (검색일: 2016년 2월 17일)

95) 하시모토 총리의 경우 총 2번의 사과를 하였다. 첫 번째 사과는 1997년 8월 28일 ‘새로운 대중외교를 목표로 요미우리 국제경제 간담회 연설’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사과는 1997년 9월 6일 ‘총리내외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정부를 반사과의 영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첫째, 언행불일치의 문제와 둘째, 전반적인 정치권을 흐름을 고려한 결과 때문이다. 이는 고이즈미 내각에도 해당된다.

96) 무라야마는 1994년 7월 18일 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내 정권하에서

<표Ⅲ-4> 일본 내 대전략노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이슈 \ 노선	평화주의	중견국 국제주의	보통국가론	신자주론
헌법개정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방위강화	비군사화	경제·기술 강화	군사역량 강화	적극적인 자위대
	방어적 방위전략	일미동맹 의존 및 지속	일미동맹강화 집단적 자위권	군사적 역량 강화 핵무장추구
아시아외교	아시아중시외교 (친親중국)	아시아중시외교 (친親중국)	아시아중시외교	반중국 (중국위협강조)
			친중 vs 반중	
역사인식	반성적	반성적	반성 vs 수정주의	수정주의적
사과입장	지지세력	지지 및 중립세력	반대세력	적극적 반대세력
인물	무라야마	미야자와, 오부치	고이즈미, 아베	이시하라, 니시베

[출처: Samuels, 2011⁹⁷⁾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둘째, 사회당과 같은 소수정당들의 ‘정치적’ 몰락이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몰락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의 선거제도의 변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기존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제 비례대표 병립제로 전환하였다.⁹⁸⁾ 소선거제 비례대표 병립제의 도입은 향후 일본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당과 사회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을 현격히 낮추었다는 점이다.⁹⁹⁾ 실제 선거개혁 후

앞으로도 미일 안보조약 및 그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미일 안보 체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언급과 동시에 ‘자위대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히노마루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존중해가겠다’ 고 언급함으로써 그가 강력히 주장하던 사회당의 대전략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어버렸다. 박철희, 2011, p. 271.

97) Samuels, 2011. p. 112.

98) 중선거제의 경우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파벌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라는 단점도 존재했다. 중선거제는 정치권의 부패의 큰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했다. 박철희, “정당과 선거,” 현대일본학회 편, 2007, pp. 210-214.

99) 박철희, 2007, pp. 214-216.

처음으로 실시된 1996년 제41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하시모토를 전면에 내세운 자민당의 경우 기존 의석수보다 28석을 늘려 239석을 차지한 반면 사민당은 14석을 잃어 고작 15석을 얻었다.¹⁰⁰⁾ 그 다음 열렸던 1998년의 선거에서 사민당은 고작 5석을 얻는 참패를 겪기도 했다.¹⁰¹⁾ 사회당(1996년 사회민주당으로 명칭 변경, 이하 사민당)의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이념적 붕괴와 선거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정치적 몰락은 90년부터 일본이 추진해오던 사과외교의 동력을 상실케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를 소멸시켰고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형국은 국정운영의 열쇠를 자민당이 쥐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렇다면 보수리버럴(헤이세이) 출신의 하시모토 내각은 당의 기본 정체성인 사과외교가 아닌 이를 뒤집는 반동을 택하였는가? 왜 당의 리버럴 정체성은 내각의 실제 정책과 일치하지 않았는가? 이는 하시모토 내각의 구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시모토 내각은 자민, 사민, 신당사키가케의 3당 연립정권으로 출범하였다. 당시 자민당 내부는 사회당과의 연립을 유지하자는 세력과 반대로 당내 보수 우파들과의 연립을 강화하자는 세력들로 구분되어 있었다.¹⁰²⁾ 하지만 하시모토 내각은 연립 유지파와 보수 연합파 중 어느 한 쪽에만 힘을 집중시키지 않았다.¹⁰³⁾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와의 연립이 중요하였지만 이념적으로 몰락한 사민당과의 연립에 굳이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연립 유지파와 보수 연합파의 분열은 과거 사회당이 추진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사과외교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 이는 고노 자민당 총재의 퇴진으로 더욱 가시화되었고 결국 자민당 내 보수 리버럴로 대표되는 구타케시타파(헤이세이)의 분열을 가져왔다. 구(舊)타케시타파의 분열과 구(舊)후쿠타파(세이화)의 결집은 자민당 내 반동 견제 세력들의 분열을 의미하였고 반(反)사과 세력들의 권력이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100) 「朝日新聞」, 1996년 10월 21일.

101) 「朝日新聞」, 1998년 7월 31일.

102) 사회당과의 연립유지를 주장하는 세력으로는 가토 고이치, 야마자키를 들 수 있고 이에 반해 당내 보수 우파들과의 연립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가지야마 세이로쿠를 들 수 있다.

103) 박철휘, 2011, pp. 283-284.

<표Ⅲ-5> 하시모토 내각 등장 후 파벌의 변화

자민당 내 파벌			
정책연구회	헤이세이(平成)		세이화(清和)
기존입장	사과지지		사과반대
분열 후	사과지지	사과반대 ↑	사과반대 ↑

자민당은 처음으로 선거공약에서도 독도, 센카쿠제도, 북방 4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의 보수적 색깔을 회복하고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였다.¹⁰⁴⁾ 자민당의 보수적 색깔 채색을 위한 노력은 역사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의 강화와 행·재정개혁의 추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미일동맹 지속과 강화의 기로에 서 있던 하시모토는 1998년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시모토 내각은 자민당의 색깔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관저주도의 행정 및 재정개혁으로 뒷받침 되었다.

사회당의 이념적 및 정치적 몰락으로 인한 견제세력의 상실, 보수 리버럴인 구 다케시타파의 분열로 인한 반(反)사과세력들의 강화는 이들의 행동적 반동으로 이어졌다. 자민당이 추진했던 사과외교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을 결성하였다. 위 모임들은 공통적으로 자민당의 역사인식은 자학사관이며 사죄사관에 기반을 둔 굴욕외교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반(反)사과세력들의 역사모임은 아래 <표Ⅳ-5>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시모토 내각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¹⁰⁵⁾

104) 김현우, 2004, p. 596.

105) 구유진, 2014, pp. 5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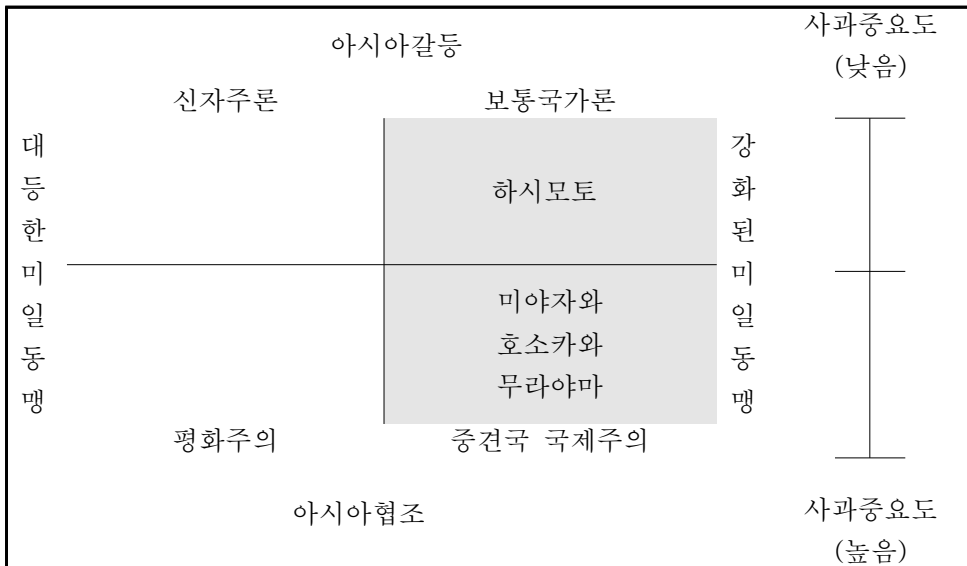
<표Ⅲ-6> 반사과세력 모임의 형성 추이

년도	85년	90년	93년	95년	96년	97년	00년	01년
숫자	1	1	1	2	1	5	1	1
년도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0년	11년
숫자	2	2	2	1	5	2	1	1

[출처: 구유진, 2014, p.58]

‘반(反)사민당’ 노선을 기준으로 표출된 반(反)사과세력들의 반동은 정당 간 경쟁의 산물이다. 즉 당시 표출된 강력한 반동들의 기저에는 ‘반(反)사민당’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었다. 이는 반(反)사과세력들의 설립시기와 목적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표Ⅳ-5> 는 반동의 심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9월 제 2차 하시모토 내각이 자민당 단독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더욱 가시화 되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는 참의원 선거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였고 하시모토 총리는 1998년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¹⁰⁶⁾

<표Ⅲ-7> 제1기 사과 흐름에서 반동 흐름으로의 전회



106) 하시모토 내각의 실패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현우, 2008, pp. 600-619를 참조.

3. 소결

제1기(1991-1998)에서 반동의 원인은 보수와 혁신세력의 대결, 사회당과 자민당의 정당 간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탈냉전기와 함께 대두된 일본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의 선택의 필요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사회적 변화와 같은 국제 및 지역적 변화는 일본의 외교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 속 국제협력법안(PKO)의 통과, 위안부 문제의 쟁점화, 타 정당 또는 총리와의 차별성, 연대의 필요성과 같은 요소들은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의 사과외교로 이어졌다. 일본의 재군사화와 적극적 평화주의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19세기 군국주의의 부활로 인식되었고 사과 및 반성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제1기에서는 중간 단계의 사과와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를 표명하였고 이는 중간 단계의 화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 김영삼 정부는 정대협과의 의견일치를 시키지 못함으로써 다중신호와 3자구도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비록 사과를 거부하는 반동이 발생하였지만 무라야마 내각은 이를 시정함으로써 화해를 유지해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반복된 사과표명은 원내 및 당내 반(反)사과세력들로부터 반동을 야기했고 이는 ‘사죄병’이 유행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다음으로 집권한 하시모토 총리가 보수리버럴인 구타케시타파 출신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동으로의 전회를 겪게 된다. 1996년 연립정권으로 출범한 하시모토 내각은 기존 사회당의 적극적인 사과외교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분열되었다. 이는 자민당 내 보수리버럴로 대표되는 구타케시타파(헤이세이)를 분열하게 만들었다. 보수리버럴의 분열로 인해 증가된 반(反)사과세력들은 사회당의 사과 및 반성정책을 부인 및 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념적 및 행동적 반동을 강행했다.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문부상은 무라야마의 사과 움직임에 대해 “과거 전쟁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과는 자학사관 또는 사죄사관에 기반을 둔 굴욕외교”이며 에토 타카미 장관은 “무라야마의 총리의 사과는 틀렸으며 식민지 시기 일본의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사민당의 역사 문제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등을 결성하였고 이들의 설립목적은 간단했다. 사민당의 사과외교를 거부하기 위해서였다. 이념적 및 정치적으로 몰락한 사민당은 이를 견제할 동력이 없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1990년대는 일본 역사상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 및 국회 차원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입지 및 입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세력 간의 경쟁, 정당 간의 경쟁은 제1기 반동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동의 정도와 속도는 한국의 반복적인 사과요구로 더 심화되었으며 이는 반(反)사과세력들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IV. 제2기: 자민당 내 파벌경쟁과 고이즈미의 등장: 반동의 10년(1998-2009)

1. 보수리버럴의 재기와 사과외교로의 복귀: 오부치 내각 (1998-2000)

2000년대 일본을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적 배경은 크게 ‘아시아 경제위기’와 ‘테러와 북핵으로 인한 물리적 위협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흐름 속에서 1998년 7월 경제회복에 실패한 하시모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오부치 내각이 출범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은 오부치 게이조 총재 선출 소식에 기존의 하시모토 내각의 흐름에서 “큰 그림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¹⁰⁷⁾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부치 내각과 김대중 정부의 관계는 역대 한일관계사에서 가장 호혜적인 관계로 기록되고 있다. 하시모토의 자민당 내각이 추진한 반사과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오부치의 자민당 내각은 다시 사과외교 흐름으로 선회하였다.

오부치 총리는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며, 이제는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화답했다.¹⁰⁸⁾ 한마디로 일본은 사과를 하였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화해를 선언했다. 이것의 결과가 바로 1998년 10월의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이다.¹⁰⁹⁾ 중간 단계의 화해를 넘어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로

107) 「중앙일보」, 1998년 7월 25일.

108) 「동아일보」, 1998년 10월 9일.

109) ‘한일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rel/r_eco/r_eco_981008_01.htm

진입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90년대 중후반의 반동을 추진했던 흐름에서 다시 사과의 흐름으로 선회하였는가?

첫째, 한국의 외환위기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경제회복의 시급성이다.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외환위기의 바람은 곧 한국까지 불어 닥쳤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과제를 떠안고 출범했다. 일본 역시 경기침체로 부실채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야마이치 증권, 홋카이도 도쿠시마 은행 등 대형은행과 증권회사가 파산하면서 급기야 -2% 성장률을 기록했다.¹¹⁰⁾ 버블붕괴와 금융부실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이었고 일본의 경기침체는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발발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오부치 내각은 스스로를 ‘경제재생 내각’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2년 내에 회복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내각의 명운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일본 역시 경제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¹¹¹⁾ 한일 양국은 각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두 국가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¹¹²⁾

둘째, 물리적 위협 증대로 인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은 일본 본토 상공을 지나 태평양 쪽에 떨어졌다. 이는 미국, 한국, 특히 일본에게 상당한 안보적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다음날 일본은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열었고 참가한 의원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표명했고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오부치 총리도 “일본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위기의식을 나타냈다.¹¹³⁾ 이 회의에서 “북한이 일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검색일: 2016년 5월 3일)

110) 조경엽, 허원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2.

111) 김현우, 2004, p. 662.

112) 박성빈,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일 금융통화협력,” 김도형, 아베 마코토 편, 『한일관계사 1965-2015: 2 경제』(역사공간, 2015), pp. 292-318.

113) 「読売新聞」, 1998년 9월 22일.

사전 경고 없이 발사한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위협적인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겨 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¹¹⁴⁾

일본은 ‘미사일 재발사 방지’를 위해서는 ‘단독행동’에서 ‘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공동행동’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꼈고 이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망(MD) 공동개발과 한국과의 대북 억제 태세 구축 강화 및 안보협력으로 이어졌다.¹¹⁵⁾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우려를 잠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오부치 총리는 사과를 표명하였고 10월 두 정상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대포동 미사일 재발사 저지 합의’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을 명시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합의 후, 한국과의 공동해상훈련 및 핫라인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두 정치지도자의 개인성향과 동아시아 정책의 일치를 꼽을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추구하였고 이는 구체적으로 ‘화해협력정책’으로 귀결되었다.¹¹⁶⁾ 이는 북한과 더불어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화해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냉전 구조의 해체를 이루겠다는 계산이었다.¹¹⁷⁾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출신인 오부치 총리는 의원시절부터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는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중 하나”라고 역설하였다.¹¹⁸⁾ 오부치의 경우 미일 동맹을 기본축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의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중국과는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러시아와는 ‘창조적 동반관계’를 각각 구축하였다. 역사상 가장 호혜적인 한일관계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오부치 총리가 제시한 사과는 과거 악행에 대한 인정, 이에 대한

114) 「朝日新聞」, 1998년 9월 1일; 오하타 히데키, “‘대포동 미사일 문제’와 3국간 협조-한일비교,” 『한일공동연구총서』, Vol. 9, (2007), pp. 28-32.

115) 히데키, 2007, pp. 199-200; 박영준, 2015, p. 154.

116) 박영준, 2015, p. 156.

117)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108.

118) 「중앙일보」, 1998년 7월 25일.

회한, 그리고 사과의 표현을 포함함으로써 관념적 사과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비록 보상, 공판, 기념, 교육과 같은 행동적 사과의 형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하는 관념적 및 행동적 반동에 대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¹¹⁹⁾ 비록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오부치-김대중의 사과와 화해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중간 단계의 화해를 넘어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에 상당 부분 다가섰다. 즉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한일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언급함으로써 두 국가가 함께 국제사회에 공헌할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중간 단계의 사과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의 화해를 구축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정대협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간 단계의 사과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와 정대협 간 의견불일치로 인한 다중신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대협을 오부치의 사과를 두고 “가슴으로부터의 사죄 역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오부치의 사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¹²⁰⁾ 정대협을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중간 단계의 사과를 수용하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두 행위자 간 의견불일치는 김영삼 정부에 이어 또 나타났다. 이로써 다중신호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119) 「동아일보」, 1998.10월 9일.

120) 「한겨레」, 1998년 10월 9일.

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일본 국내적으로 즉각적인 반동에 부딪히기도 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산경)신문은 “국회의원 19명이 과거사를 사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¹²¹⁾ 자민당의 에토 다카미 의원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바뀔 때 마다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¹²²⁾며 반복적인 사과에 대한 피로도를 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반동은 무라야마 담화 때의 반동보단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사과의 표명 다음날 오후 일본 국회를 방문하였다.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참의원관과 중의원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분여동안 12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연설했고 이는 NHK에 의해 생중계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비록 작은 반동들에 부딪혔지만 전반적인 수용의 분위기였고 이 흐름은 1999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으로 더욱 안정화 되었다.¹²³⁾ 금융 재생을 위한 법안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선 자유당과 공명당과의 연립이 필수적이었고 1998년 11월 19일, 1999년 7월 7일에 각각 연립을 공식화했다.

공명당과 오부치를 중심으로 한 온건 보수들과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교노선이었다. 두 세력 모두 미일 동맹과 아시아 외교를 중시했으며 특히 공명당은 유엔과 중국외교 및 평화 외교에 힘을 쏟음으로 보수 색채를 띤 자민당의 보완적 존재였다.¹²⁴⁾ 하지만 1990년대 말 일본의 사과외교의 흐름은 2000년 4월 오부치 총리가 급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입원함으로써 전환기를 맞게 된다. 오부치 총리가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리 총리가 취임하면 서부터 서서히 반동으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21) 「조선일보」, 1998년 10월 8일.

122) 「동아일보」, 1998년 10월 8일.

123) 보수 연맹들의 형성 시기와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직후는 여러 보수연맹이 형성되었지만 오부치 총리의 사과 이후에는 보수 연맹이 형성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사과에 대한 반동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124) 박철휘, 2011, p. 294.

2. 보수우파의 등장과 반동의 가속화: 모리,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 내각(2000-2009)

모리 총리의 경우 1년의 임기동안 기본적으로 오부치의 국내적 및 대외적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리가 철저하게 오부치파의 협력을 얻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실언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결국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에게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을 넘겨주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노나카(野中廣務), 참의원 회장이던 아오키(青木幹雄)의 협력과 인준이 없었다면 모리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우파(세이화) 출신 모리 총리가 보수리벌인 오부치 내각을 계승함으로 당내외에서 반발을 야기했고 이는 역으로 보수우파의 정체성이 명확한 고이즈미의 정치적 장래를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¹²⁵⁾ 보수우파 출신 고이즈미의 등장은 반동으로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펨펠(Pempel)은 고이즈미 내각 시기의 국내정치적 변화를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중 첫째는 자민당 내부에서의 권력 변화이며 둘째는 권력 변화로부터 야기된 민족주의적 및 수정주의적 세력의 부상이다.¹²⁶⁾ 우선 자민당 내부에서의 권력 변화를 살펴보자. 고이즈미는 ‘일본을 바꾸겠다, 자민당을 바꾸겠다, 자민당을 깨부수겠다’고 선언했다. 고이즈미는 공약으로 과도한 공공사업 지출, 나눠먹기식 정치, 특수이익의 보호 등과 같은 기존의 자민당 정치의 변화를 약속하면서 ‘반(反)파벌정치’와 ‘자민당 자체의 변화’를 강조했다.¹²⁷⁾ 박철희는 고이즈미의 정

125) 박철희, 2011, p. 325.

126) 나머지 변화들을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한 사회당의 몰락과 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통한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 자신감의 하락이다. Pempel, “Japanese Strategy under Koizumi” in Rozman, Togo, and Ferguson, *Japanese Strategic thought towards Asia* (Palgrave Macmillan, 2007), pp. 110-115.

127) 한의석, “고이즈미의 등장과 자민당의 정책변화-도시유권자와 선거정치,” 『한국정치학회보』, Vol. 45, No. 4 (2011), pp. 280; George Mulgan, *Japan's Failed Revolution: Koizumi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Australia: Asia Pacific Press, 2002)

치를 자민당 내 오부치파(헤이세이)로 대표되는 ‘온건 보수의 정치 방식을 해체’ 하고 자신이 속한 모리파(세이화)의 강화추구로 요약한다.¹²⁸⁾ 한마디로 ‘반(反)온건 보수화’ 또는 ‘비(非) 모리파 제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는 왜 90년대의 정당 간 경쟁이 아닌 정당 내 경쟁을 택하였을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혁신 세력이었던 사민당(당시 사회당)은 이미 95년을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정치투쟁은 큰 이득을 줄 수 없었다. 둘째, 1990년대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오부치파를 약화시켜야만 했다. 더욱이 고이즈미는 과거 오부치파의 연립식 정권쟁탈 방식으로는 위기의 자민당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²⁹⁾ 따라서 고이즈미는 이미 약화된 야당과의 대결보다는 자민당 내 기존 기득권 세력들과의 대결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는 1990년대 온건 세력들이 추구해온 국내적 및 대외적 정책노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¹³⁰⁾

고이즈미의 ‘반(反)온건 보수화’ 노선은 다음 세 가지 사건으로 가시화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제1차 내각 구성이다. 고이즈미는 내각 구성 당시 파벌의 추천을 반영하지 않고 이른바 ‘1명씩 골라내기(一本釣り)’ 방식을 택하였다.¹³¹⁾ 파벌 간 균형을 완전 무시한 채 18개 중 오직 5 자리만 파벌 출신을 고용하였다.¹³²⁾ 심지어 그 자리마저 자신의 파벌인 모리파에서 3명을 그리고 하시모토 파에서는 단 2명을 입각시켰다.

두 번째 사건은 2003년 10월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나카소네파와 미야자야파의 영수였던 나카소네와 미야자와 전 수상을 비례대표 후보에

128) 박철휘, 2011, p. 336.

129) Pempel, 2007, p. 112.

130) Jacob Schlesinger, *Shadow Shoguns: The Rise and Fall of Japan's Postwar Political Machine* (New York: Simon & Schuster, 1997)

131) 박철휘, 2011, p. 338.

132) 고이즈미는 17개의 자리에 여성 5명, 민간인 및 비정치인 3명, 40대 2명, 무파벌 2명, 공명당 1명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남은 4자리에 파벌인사를 단행했다.

서 제외시켜버린 사건이다. 나카소네 총리는 하시모토 총리와 가토 간사장으로부터 종신 비례 1위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는 고이즈미 총재의 권한이 막강했음을 그리고 비모리파 파벌의 약화 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¹³³⁾

세 번째 사건은 우정사업의 민영화이다. 모리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건 세력들의 근간을 뒤흔들어야했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우정사업의 민영화 전략이었다. 예산의 분배와 집행에 관련된 기득권의 연계 고리, 즉 이익 배분에 기반한 온정주의의 고리야말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우정사업이 있었다.¹³⁴⁾ 오부치파는 우정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부패 및 낭비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고이즈미는 우정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오부치파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¹³⁵⁾

그렇다면 이러한 비모리파 제거가 한일간의 사과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고이즈미는 비모리파 제거는 국내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990년대 유지되었던 사과외교는 자민당 내 온건세력인 미야자와, 호소카와, 오부치에 의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고이즈미로서는 이를 뒤집는 외교적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행동적 및 관념적 반동의 형태로 가시화 되었다. 고이즈미 내각의 행동적 반동은 크게 3가지 노선을 통해 가시화 되었다.

첫째, 신사참배의 강행이다. 고이즈미는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 6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신사참배 이후로 한국과 주변국에게 총리 및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¹³⁶⁾ 고이즈미는 외교적 반발을 고려해 2001년 8월 13, 2002년 4월 21일, 2003년 1월 14일, 2004년 1월 1일, 2005년 10월 17일에 참배하였지만 총리로서 마지막

133) 박철휘, 2011, p. 342.

134) 우정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석, 2011, 참조.

135) Steven R. Reed and Scheiner Ethan, "Electoral Incentives and Policy Preferences: Mixed Motives behind Party Defections in Japa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3, No. 3 (2003), pp. 469-490.

136) 남상구, 2015, pp. 379-410.

참배는 2006년 8월 15일에 강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고이즈미는 이와 같은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았다.¹³⁷⁾ 초기에는 단독으로 참배하다가 후에는 현직관료 및 의원들의 집단참배로 이어졌다. 2005년의 경우, 패전 60주년을 맞아 고이즈미 총리가 담화 형식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 당일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의원 83명이 야스쿠니에 모습을 드러내며 즉각적인 반동을 보였다.¹³⁸⁾

둘째, 우익 교과서의 문부성 검정 통과를 들 수 있다. 2001년 4월,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에서 발간한 교과서를 포함 총 8권의 우익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사건이었다.¹³⁹⁾ 도쿄 도 위원회는 새역모에서 발간한 후쇼샤(扶桑社) 역사교과서를 회의 시작 불과 5분 만에 채택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시 일본의 우경화의 분위기가 단순히 정치권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시민차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⁴⁰⁾ 이와 같은 분위기는 도쿄 교육위에서 국기·국가에 대한 예절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원 250여명을 징계처분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극우의 대부 격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쿄 도지사로 앉아있는 것 역시 당시 일본 내 분위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새역모는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다.¹⁴¹⁾ 이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

137) 「한겨레」, 2004년 1월 2일.

138) “이날 참배 의원은 자민-민주 등 소속을 망라한 것으로 참의원 24명과 전직 중의원 23명 등이 참석했으며 대리인을 보낸 중참의원은 36명에 달했다.” 「共同通信社」, 「朝日新聞」, 2005년 8월 15일.

139)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문부상은 우익계열의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및 도쿄(東京)서적, 오사카(大阪)서적, 니혼(日本)서적, 시미즈(清水)서원, 데이코쿠(帝國)서원,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등 기존 7개 교과서에 대해 검정합격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001년 4월 3일.

140) 이들 교과서는 주변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첫째, 군대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았고 둘째, 조선의 군제개혁 지원이 조선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것으로 기술했으며 셋째,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정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아일보」, 2001년 4월 3일.

141) 노리 하야시, “역사교과서 문제와 일본정치의 동향”, 『문화과학』, Vol. 42,

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 한국이 요구한 30개의 수정안 중 고작 2개만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¹⁴²⁾

셋째, 반사과적세력 연맹 및 시민단체들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설립된 연맹 및 모임들은 총 29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모임(歴史教科書問題を考える会), 평화를 바라며 진정한 국익을 생각해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平和を願い眞の国益を考え靖国参拝を支持する若手国会議員の会), 올바른 일본을 만드는 모임(正しい日本を創る会)이다. <표 IV-5>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2기 시기에만 14개, 약 50%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은 고이즈미로부터 출발한 보수화가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¹⁴³⁾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망언, 즉 관념적 반동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메이파 회장인 에토 다카미 중의원이 일본의 역사 청산과 관련해 “(식민지였던 나라는) 과거의 중주국에 사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발언했고¹⁴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소타로(麻生太郎) 정조회장이 “일제시대 때의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이뤄진 것”라고 언급했다.¹⁴⁵⁾ 이러한 발언들이 1990년대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정정 또는 각료 파면을 했지만 200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즉 고이즈미는 이를 저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강렬히 반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이즈미 내각과 2000년대 후반까지 집권한 자민당 정권의 ‘반(反)온건 보수화’ 전략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이즈미의 비모리파에 대한 견제와 배제는 민족주의적 및 수정주의적 인식을 지닌 극우보수들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오부치 내각과 김대중 정부가 이룩한 중간 단계의 화해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는 무너지게 되었다.

(2005), pp. 104-105.

142) 「한국일보」, 2001년 7월 9일.

143) 구유진, 2014. p. 58.

144) 「동아일보」, 2003년 1월 19일.

145) 「경향신문」, 2003년 6월 1일.

노무현 정부는 고이즈미의 내각의 반동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임기 중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외교마찰을 피하고자 했다. 이에 정대협은 공개서한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대일 외교 협상에서 주체적으로 제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자료공개,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다.¹⁴⁶⁾ 노무현 정부 역시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같이 정대협간의 의견불일치를 겪었다. 일본의 인정과 사과의 반복과 더불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정대협과의 의견불일치, 다중신호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3자 구도를 고착화시켰다.

이후 등장한 아베, 후쿠다, 아소 내각은 고이즈미의 노선을 그대로 흡수하진 않았지만 아베, 후쿠다의 경우 모리파 소속이었고 아소의 경우 고이즈미 정권의 정조회장, 총무상, 외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고이즈미는 2005년 총선에서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절대 안정 다수의 구도를 확보하였고 아베는 이를 토대로 보수화의 정점을 찍었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 헌법개정과 같은 이념정치를 추구함으로써 점차 국민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나가타초(永田町) 정치를 펼쳐나갔다.

이를 위해 아베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추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역사관을 부정하고자 뜻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2007년 1월 31일, 미국 하원에서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아베는 이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당초 정의된 강제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발언했고 ¹⁴⁷⁾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정부 관리가 집에 침입하여 위안부를 데리고 가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업자가 사실상 강제한 것을 광의의 해석으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하원 결의안의 객관성에 대해 반박했다.¹⁴⁸⁾

146) 「연합뉴스」, 2005년 1월 19일.

147) 「朝日新聞」, 2007년 3월 5일.

아베 내각에서의 반동은 총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각 및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내각 구성차원에서 아베는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에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를 임명하였다. 나카가와와는 1997년 아베와 함께 후소샤(扶桑社)판 왜국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의 핵심 멤버였고 1998년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발언한 인물이다.¹⁴⁹⁾ 또한 2007년 아베 1년 임기 동안에만 위안부문제와 난징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慰安婦問題と南京事件の真実を検証する会), 신헌법제정 의원동맹(新憲法制定議員同盟), 가치관외교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価値観外交を推進する議員の会) 등 5개의 반사과 의원연맹들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형성되었다. 2000년대 초 중반, 일본 국회 보수화의 심화는 고이즈미 내각의 관념적 및 행동적 반동이 강화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표Ⅳ-1> 2000년대 일본의원들의 보수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항목	연도	응답결과		응답자수
		찬성	반대	
방위력강화	2003	48.2%	20.2%	456
	2005	52.1%	30.1%	396
헌법개정	2003	29.8%	39.9%	456
	2005	34.9%	40.7%	396
타국 선제공격	2003	31.4%	31.6%	456
	2005	35.2%	30.1%	396

[출처: 이이범, 2014, pp. 101 참조]

하지만 아베의 이념정치와 연이은 정치 부패 스캔들은 자민당의 지지율을 하락시켰고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참의원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당의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주는 참패를 겪게 되었다. 아베로 지나치게 우경화된 자민당은 상대적으로 리버럴에 가까운 후쿠다를 다음 총리로 선정했다. 민주당의 적극 공세와 자민당의 정치적 패배를 안고 출범한 후쿠다는 국내외적으로 저자

148) 박철휘, 2011, p. 408.

149) 「경향신문」, 2006년 9월 25일.

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¹⁵⁰⁾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총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사과를 표명하거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고이즈미, 아베 시절 흔들리던 외교를 정상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했다.¹⁵¹⁾

2008년 9월에 취임한 아소의 경우, 취임 직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직면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9천억 엔에 달하는 추가 경기대책비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이즈미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노선이었다.¹⁵²⁾ 하지만 한일 및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및 지역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한일 양국은 2008년 7월 발생한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최대한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¹⁵³⁾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정치적 반동은 지속되었다. 새역모의 회장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는 2009년 6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권철현 주일대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일본 교과서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라고 비판하였고 7월 17일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하지만 모리과 출신 아소 내각의 ‘색깔 잃은 정치’는 당내 반(反)아소의 움직임을 야기했다. 자민당은 분열하기 시작했고

150) 후쿠다 독트린의 다음 다섯 가지를 약속하였다. 첫째, 공동체 실현을 향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한다. 둘째, 미일동맹을 아태 지역의 공공재로 강화하겠다. 셋째, 일본은 평화 협력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넷째, 젊은 유학생 교류 30만 계획을 실시하겠다. 다섯째, 경제성장, 환경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http://www.kantei.go.jp/jp/hukudaspeech/> (검색일: 2016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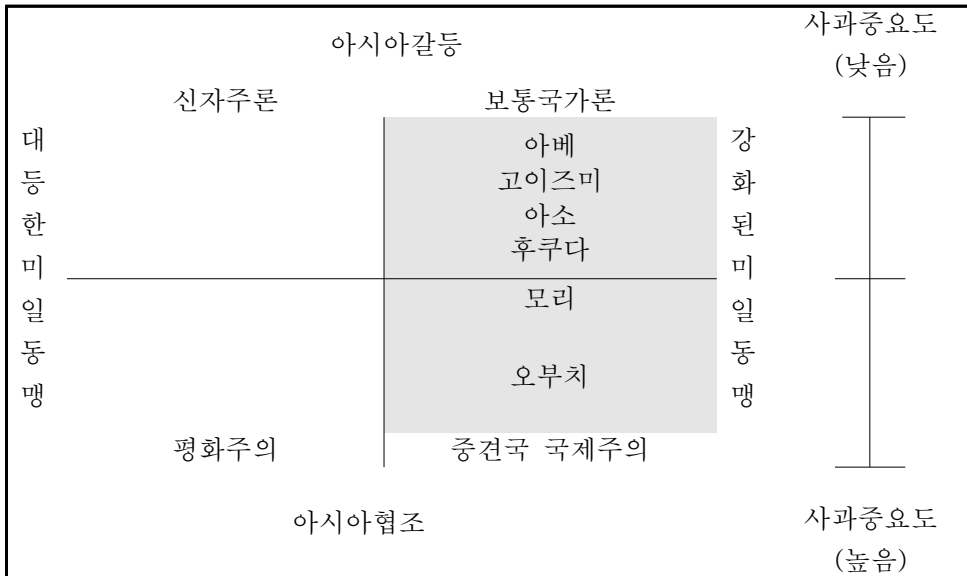
151) 박철휘, 2011, p. 424.

152) 麻生太郎, “消費税を10%にして基礎年金を全額税負担にしよう,” 『文芸春秋』(2008년 8月号), pp. 176-187.

153) 2009년 1월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독도나 과거사 등 민감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굳이 현안도 아닌데 그때마다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 (논형, 2010) p. 204.

2008년 11월을 경계로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2009년 8월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김으로써 2000년대 국내정치적 반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표Ⅳ-2> 제2기의 사과적 흐름에서 반동흐름으로의 전회



3. 소결

제2기(1998-2009)에서 반동의 원인은 자민당 내의 보수리버럴(헤이세이/코치)과 보수우파(세이화)의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발발한 아시아 경제위기와 북핵위기 및 테러발발로 인한 물리적 위협의 증대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증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공해주었다. 오부치 내각은 이와 같은 국제 및 지역적 배경을 고스란히 안고 출범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침체장기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군사적 위기의식의 심화는 한국과의 경제적 및 군사적 협력으로 연결되었다.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오부치 총리는 ‘한일공동선언’을 통해 사과를 표명하였고 이어서 ‘대포동 미사일 재발사 저지 합의’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을 명시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이와 같은 국제 및 지정학적 요소들은 오부치 총리의 보수리벌 노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부치 총리가 제시한 사과는 과거 악행에 대한 인정, 이에 대한 회한, 그리고 사과의 표현을 포함함으로써 관념적 사과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정대협에서 요구한 비록 보상, 공판, 기념, 교육과 같은 행동적 사과의 형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부치-김대중의 사과와 화해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첫째,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중간 단계의 화해를 넘어 가장 높은 단계의 화해에 상당 부분 다가섰다. 즉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대협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간 단계의 사과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와 정대협 간의 견불일치로 인한 다중신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두 행위자 간 의견 불일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다중신호의 문제는 더욱 심화시켰다.

오부치 총리의 급작스러운 뇌경색과 등장한 모리 내각의 실패는 고이즈미의 등장을 열어주었고 이는 보수우파의 등장과 반동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노선은 한마디로 ‘비(非) 모리파(세이화) 제거’ 전략이다. 즉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오부치파의 와해를 의미하였고 이는 온건 세력들이 추구해온 국내적 및 대외적 정책노선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모리파 중심의 내각구성, 비모리파 영수들의 공천탈락, 우정사업 민영화로 가시화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정기적 신사참배, 문부성의 우익교과서 통과, 반사과적세력 연맹 및 시민단체들의 급격한 증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제2기에만 14개의 반(反)사과 연맹 및 시민단체들이 생겨났다. 이들 모임은 공통적으로 개헌지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반대, 보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수리버럴들이 주장한 개헌 반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아시아중시외교노선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정치적 노선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오부치 내각에서 이룬 안정적 화해는 무너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2기의 반동은 제1기에서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양상보단 정당 내 세력간의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리버럴과 보수우파들의 정치적 경쟁의 과정에서 사과문제가 뒤집혀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국내정치적 정체성에 기인한 반동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반동의 양상이 단순 사과에 대한 반동을 나타낸 제1기와 달리 사과 문제와 더불어 개헌과 외교노선의 대전략을 둘러싼 반동으로 그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V. 제3기: 민주당 내 파벌경쟁과 몰락: 무너진 사과세력, 반동의 심화(2009-2012)

1. 무너지는 사과세력: 하토야마, 간 내각(2010-2011)

2010년대 일본을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적 배경은 크게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부상’ 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1996년 결성 당시, 민주당은 반(反)자민, 반(反)공산, 반(反)공명의 노선을 채택하였다. 2003년까지 자민당, 공산당, 공명당을 제외한 세력들을 흡수하면서 통합과정을 거치고 그 후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민주당 노선의 가장 중심은 ‘반(反)자민 노선’ 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의 정책적 대립축을 형성해 나갔다.¹⁵⁴⁾ 아베에 이은 후쿠다와 아소의 정치적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대안으로 등장한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누렸다.¹⁵⁵⁾ 그 결과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표 V-1>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정당명	당선자수	선거이전	대비
민주당	308	115	+193
자민당	119	300	-181
공명당	21	31	-10
공산당	9	9	0
사민당	7	7	0
모두의당	5	4	+1
일본	1	0	+1
무소속	6	6	0

[출처: 「朝日新聞」, 2009년 8월 31일]

154) 박철희, “일본 야당세력의 재편과 정당경쟁체제,” 『한국정치학회보』, Vol. 40, No. 5, (2006), p. 279-299.

155) 이이범, “제 22회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분석,” 『일본연구논총』, 2010, p. 221-244.

하토야마 내각은 아베, 후쿠다, 아소의 ‘나가타초 정치’와 ‘미일 동맹에 대한 의존’ 노선과의 대립축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정치적으로는 ‘생활이제일生活が第一 정치’와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일본¹⁵⁶⁾, 즉 ‘대등한 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노선을 택하였다. 전자의 경우, 전통적 및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 고이즈미와 달리 하토야마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¹⁵⁷⁾ 후자의 경우, 고이즈미를 필두로 아베, 후쿠다, 아소 내각 때 강화된 미일동맹에서 대등한 미일동맹을 추구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반(反)자민 노선’을 공고화 하고자 했다.

<표 V-2> 하토야마의 ‘반(反)자민’ 노선

국내정치			국제정치		
사 회 복 지 충 실	전통적 · 보수적 가치		아시아갈등		미 일 동 맹 강 화
		고이즈미		고이즈미	
	하토야마		하토야마		
	개인주의적 가치		아시아협조		
		재 정 건 전 화	미 국 과 대 등		

[출처: 박철희 외, 2014, pp. 28-30]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은 미중 양강체제에 직면한 아시아 중소 규모 국가와 일본의 문제의식을 일체화시켜 이들과의 협력으로 양 대국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함에 있었다.¹⁵⁸⁾ 한국은 일본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였고 이는 일본 외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¹⁵⁹⁾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토야마 총리의 첫 해외 방문

156) 박철희 외,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 258.

157) 일례로 고등학교 교육 무료화, 고속도로 무료화, 아동수당 지급, 농가소득보전을 들 수 있다.

158) 최희식, “한일관계: 전략적 연대에서 방기로,” 박철희 외 편, 2014, p. 255.

159) 2009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은 가치관을

지가 한국이었다는 점이다. 한일의원교류위원회의 회장 출신인 하토야마 총리는 신사참배에 대한 명확한 거부와 방한 시 국립현충원 참배 등을 통해 다시 사과외교를 돌려놓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공약수정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는 하토야마 정권의 동력을 상실케 하였다. 결국 하토야마 총리는 이를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반(反)자민당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들은 이념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어 취임한 간 총리는 민주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소비세 증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 결과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패하며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다.¹⁶⁰⁾ 7월 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를 얻은 민나노당(みんなの党)의 약진이었다.

<표 V-3> 제23회 참의원 선거 결과

정당명	당선자수	선거이전	대비
민주당	106	116	-10
자민당	84	71	+13
공명당	19	21	-2
공산당	6	7	-1
사민당	4	5	-1
민나노당	11	1	+10
일어서라일본	3	3	0
무소속	2	3	-1

[출처: 「読売新聞」, 2010년 7월 14일]

공유하는 중요한 인접국이며, 아시아 외교의 핵심이 되고 있다.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http://www.kantei.go.jp/jp/hatoyama/statement/200910/09kyoudou.html>
 (검색일: 2016년 2월 19일)

- 160) 「読売新聞」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해 간 총리의 소비세 발언 비판이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민주당 공약에 대한 불만이 31%를 차지했다. 반대로 자민당을 지지한 이유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이 71%로 가장 높았다. 「読売新聞」, 2010년 7월 14일; 박철휘, 민주당 책 34쪽 재인용.

이후 집권한 간 총리는 하토야마의 ‘반(反)자민’ 노선에서 현실주의를 가미한 ‘반(半)자민’ 노선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노선의 변화는 크게 2가지로부터 기인한다. 첫째, 민나노당의 약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민당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 총리는 이와 같은 민심을 적절히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무엇보다도 간 총리는 반(反)오자와, 반(反)하토야마 세력에 속해있다. 따라서 하토야마 총리가 추구한 ‘반(反)자민’ 노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간 총리는 ‘반(反)자민’의 이념적 노선에 현실주의를 가미한 ‘반(半)자민’ 노선을 택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교안보 노선의 대폭적인 수정이었다. 간 총리의 외교안보 노선의 전환은 2010년부터 심화된 센카쿠 사태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 외교노선에 몇 가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첫째, 대등한 미일동맹 추구에서 다시 미일동맹 강화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초강수 대응과 일본의 굴복은 안보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속 미일동맹 강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둘째, 일본 안보에서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 심화이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가시화된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위협은 2010년을 기점으로 명백해졌다. 2010년 12월 17일 각의에서 발표된 신방위대강에서는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적 변화가 생겼다.¹⁶¹⁾ 기존의 기반적 방위에서 동적 방위력이라는 신 개념하에 서남부와 도서방위에 중점을 두는 적극 억지 전략이 발표되었다.¹⁶²⁾

셋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민주당의 기본적인 아시아 중시외교의 골자 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한위협의 증가와 해양에서의 잦은 마찰로 인한 중국위협의 증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⁶³⁾ 이러한 전략적 계산하에 간 정권은 한국에

161) 박영준,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 『EAI 논평』 No. 16, (2010).

162) 박철희 외, 2014, p. 28.

163)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마찰은 2010년 4월, 5월, 7월에 가시화되었고 9월에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조선의궤를 비롯한 문화재 1,200점 또한 한국에 반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 2010년 8월 10일 간 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하였다.¹⁶⁴⁾

<표 V-4> 간의 ‘반(半)자민’ 노선

국내정치			국제정치			
사 회 복 지 충 실	전통적 · 보수적 가치		미 국 과 대 등	아시아갈등		미 일 동 맹 강 화
	하토야마	간		하토야마	간	
	개인주의적 가치			아시아협조		

[출처: 박철휘 외, 2014, pp. 39-41]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이 간 담화가 “국익을 해쳤고 충분한 당내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이는 민주당내 우익성향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마키 요시오(牧義夫) 중의원의원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토론모임인 '일본국연구회(日本國研究會)'를 결성하는 행동적 반동의 모습을 보였다.¹⁶⁵⁾ 하지만 간 담화는 한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발표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일본이 얼마만큼 한국에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비록 반사과세력들이 이를 부인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총리담화를 한일간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밝은 한일관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간 총리와 일본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인다”며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¹⁶⁶⁾ 정대협도 “최근 간 나오토 총리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164) 담화의 핵심은 첫째,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강제성 인식과 반성 사죄, 둘째,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전달, 셋째, 사할린 한국 귀국과 유골 봉환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_2010』, 논형, 2011, p. 21.

165) 「조선일보」, 2010년 8월 13일.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일보한 변화다"라고 평가했다.¹⁶⁷⁾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간 담화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었다.

2. 되돌릴 수 없는 반동의 영역으로: 노다 내각(2011-2012)

민주당의 사과외교를 위한 노력도 간 총리의 사임과 노다 노선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간 내각 당시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와 동일본대지진의 미흡한 대처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고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 정치권 및 사회 보수화로 이어졌다. 노다 내각의 출범은 기본적으로 친(親)오자와파와 반(反)오자와파의 정당 내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오자와가 격렬히 반대했던 ‘소비세 증세’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에 오자와의 탈당으로 이어졌고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노다의 정치적 노선은 한마디로 ‘반(半) 자민’에서 ‘친(親) 자민’으로의 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V-5> 친(親)오자와파와 반(反)오자와파의 정당 내 경쟁양상

선거	2006년 당대표 선거					
후보자	오자와(승)			간(패)		
지지그룹	하토야마	구사회당계	소장파	간 그룹		
선거	2009년 당대표 선거					
후보자	하토야마(승)			오카다(패)		
지지그룹	<친오자와계>			<비오자와계>		
	하토야마	오자와	노다	간	마에하라	
선거	2010년 당대표 선거					
후보자	간(승)			오자와(패)		
지지그룹	<반오자와계>			<친오자와계>		
	노다	간	마에하라	오자와	하토야마	

[출처: 박철희 외, 2014, pp.84-89를 참조 필자 재작성]

166)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https://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59&seqno=40&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 (검색일: 2016년 2월 19일)

167) 「연합뉴스」, 2011년 1월 5일.

‘친(親) 자민’ 노선을 택한 노다 총리는 대표선거 중 “A급 전범은 전쟁 범죄인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노다 내각의 이와 같은 정치적 노선은 겨우 안정을 찾은 한일관계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었다. 한일 간의 갈등은 자민당 내의 ‘영토 관련 특명위’ 소속 의원 3명이 울릉도에 시찰단을 파견하려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하는 사건으로 가시화되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2011년 12월 18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는 ‘중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 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¹⁶⁸⁾ 악화된 흐름 속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고 천황사죄요구를 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요구는 ‘아시아 중시 외교’ 를 추구하던 민주당의 외교노선에 썩기를 박았고 이는 민주당의 존재근거를 무너뜨렸다.¹⁶⁹⁾ 이는 반성과 사과를 해 온 반(反)자민 노선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사과외교를 추진해야할 명분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발언은 일본을 분노케 만들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 光一郎) 외무상은 독도방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는 한국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정조회장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한의 신뢰관계를 근거로부터 뒤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¹⁷⁰⁾ 일본의 야당들은 “민주당 정권의 무대책 외교가 초래한 결과” 라며 비판했다.¹⁷¹⁾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인 나카이 히로시 중의원 예산위원장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이다니 화가 난다.” 고 언급했고 하타 유타로(羽田雄一郎) 국토교통상 등 2명의 각료가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 고 밝혔다.¹⁷²⁾

168) 「韓日新聞」, 2011년 8월 30일.

169) 박철희 외, 2014, p. 263.

170) 「연합뉴스」, 2012년 8월 10일.

171) 「국민일보」, 2012년 8월 10일.

172) 「한겨레」, 2012년 8월 10일.

이는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질 뻔했다. 군 당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나 자위대 항공기가 독도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⁷³⁾ 이명박 대통령은 무장헬기의 호위를 받으며 방문했고 인근 상공에는 F-15K 전투기 편대가 출격해 초계비행을 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뒤 우익단체 회원이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져 현관 유리창을 깨고, 도쿄 등 대도시에서 우익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¹⁷⁴⁾ 이로써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중간단계의 화해마저 위태로워졌다. 독도문제가 사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사과외교의 정당성이 흔들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 V-6> 노다의 ‘친(親)자민’ 노선

국내정치			국제정치		
사 회 복 지 충 실	전통적 · 보수적 가치		아시아갈등		미 일 동 맹 강 화
		(고이즈미) 노다	미 국 과 대 등	(고이즈미) 노다	
		간		간	
	개인주의적 가치		아시아협조		

[출처: 박철휘 외, 2014, pp. 50-57]

민주당의 ‘반(反)자민→반(半)자민→친(親)자민’으로의 정당 내 경쟁은 점차 이념적 차별성을 잃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몰락은 2012년 중의원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의 230석에서 57석을 획득한 반면 자민당은 기존의 118석에서 294석을 얻음으로 압승했다. 심지어 우익정당인 일본유신회¹⁷⁵⁾가 기존의 11석에서 54석을 얻었고 총선에 나선 12개 정당 중 자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 대표가 전 자민당 소속이었다.¹⁷⁶⁾ 2012년 12월 제46회 중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헌법

173) 「동아일보」, 2012년 8월 11일.

174) 「한겨레」, 2012년 8월 12일.

175) 일본유신회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하시모토 오사카시장과 같은 민주당의 정책 수행 능력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 만든 우익 정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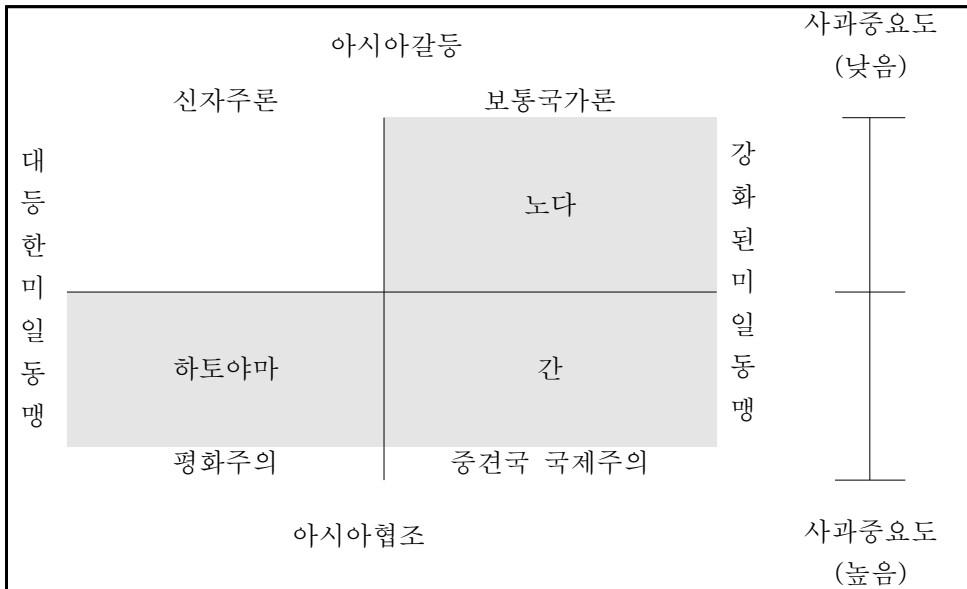
9조 개정여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찬성입장이 2009년 34.3%와 29.8%에서 72%와 79%로 상승했다.¹⁷⁷⁾ 이는 얼마나 당시 일본 정치권이 얼마나 보수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V-7> 제46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정당명	당선자수	선거이전	대비
민주당	57	231	-174
자민당	294	118	+176
공명당	31	21	+10
공산당	8	9	-1
사민당	2	5	-3
민나노당	18	8	+10
일본유신회	54	11	+43
무소속	5	7	-2

[출처: 「韓日新聞」, 2011년 8월 30일]

<표 V-8> 제3기의 사과적 흐름에서 반동흐름으로의 전회



176) 모두의 당의 와타나베는 자민당에서 탈당한 정치인이었고, 일본유신회 대표인 이시하라도 전직 자민당 의원이자 자민당의 지원을 받아 도쿄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신당 미래도 가다라는 전 시가 현지사가 이끌고 있었지만 실제 실세는 전 자민당 소속인 오자와였다. 박철휘, 2014, p. 79.

177) 이이범, 2014, pp. 91-117.

3. 소결

제3기(2009-2012)에서 반동의 원인은 민주당 내의 중도보수, 중도좌파, 강경보수 간의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대 초 일본을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적 배경은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중도보수 출신인 하토야마 내각의 경우 반(反)자민 노선추구를 위해 국내정치적으로는 ‘생활이제일生活が第一 정치’와 대외적으로는 ‘대등한 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노선을 택하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신사참배에 대한 명확한 거부와 방한 시 국립현 참원 참배 등을 통해 다시 사과외교를 돌려놓고자 하였다.

이후 등장한 중도좌파의 성향의 간 총리는 ‘반(反)자민’ 노선에서 현실주의를 가미한 ‘반(半)자민’ 노선을 선택하였다. 간 내각 당시 발생한 센카쿠 분쟁 사태는 첫째, 대등한 미일동맹 추구에서 다시 미일동맹 강화로 선회하게 만들었고 둘째, 일본 안보에서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 심화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천안함 사태와 센카쿠 분쟁사태로 가시화된 중국위협은 간 총리의 중도좌파 성향과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외교의 노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간 총리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조선의궤를 비롯한 문화재 1,200점 또한 한국에 반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였고 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한 간 담화로 이어졌다.

간 총리가 제시한 사과 역시 보상, 공판, 기념, 교육과 같은 행동적 사과의 형태로 이어지지 못한 중간 단계의 사과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표명한 사과라는 점, 조선의궤를 반환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제2기 고이즈미를 필두로 시작된 반동으로 인한 무너진 화해가 다시 협력을 중시하는 중간 단계의 화해로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권철현 주일대사가 “과거사보다 국

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정대협과의 의견불일치와 3자 구도의 고착화가 심화되었다.

하토야마와 간 총리가 힘들게 되돌려놓은 중간 단계의 화해는 강경 보수 성향의 노다를 기점으로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친(親) 자민' 노선을 택한 노다 내각은 겨우 안정을 찾은 한일관계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었다. 노다 총리는 “A급 전범은 전쟁 범죄인이 아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천황사죄요구발언은 힘들게 회복한 중간 단계의 화해를 붕괴시켜버렸다.

따라서 제3기의 반동은 제2기와 같이 나타난 정당 내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위협이라는 지역변수는 중도좌파 성향인 간 총리의 노선과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외교의 노선을 강화시켰고 이는 사과외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위협이라는 지역변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요구발언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응변수는 강경보수 성향인 노다 총리의 반동노선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 결과는 낳게 되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사과와 반동의 정치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세 시기의 일본의 사과와 반동, 그리고 재사과/재반동을 살펴봄으로써 왜 반동을 하는지 또 역으로 일본이 왜 사과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제1기(1991-1998)에서 반동의 원인은 보수와 혁신세력의 대결, 사회당과 자민당의 정당 간 경쟁으로 발생하였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수와 혁신세력으로 대표되는 사민당과 자민당은 각자의 입지 및 입장을 놓고 대립했다.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내각은 사과외교를 추진하였고 하시모토 내각은 사민당의 사과외교를 거부하기 위해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등을 결성하였다. 제1기의 반동은 한국에 기인한 반동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반성과 사과에 반대하는 모임들의 형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제2기(1998-2009)에서 반동의 원인은 자민당 내부의 파벌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발생하였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북핵위기 및 테러발발로 인한 물리적 위협의 증대라는 지역적 변수를 고스란히 안고 출범한 오부치 내각은 ‘한일공동선언’을 통한 적극적인 사과 및 화해외교를 추진했다. 하지만 고이즈미가 내각의 출범과 함께 신사참배, 우익 교과서 검정 통과, 반(反)사과세력의 결집이 심화되었다. ‘비(非)모리파의 제거’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전략은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보수리버럴 해체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2기의 반동은 정체성에 기인한 반동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이는 단순 사과에 대한 반동을 나타낸 제1기와 달리 사과 문제와 더불어 개헌과 외교노선의 대전략을 둘러싼 반동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제3기(2009-2012)에서 반동의 원인은 민주당 내부의 그룹 경쟁, 즉 정당 내 경쟁으로 발생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의 노선은 ‘반(反)자민→반(半)자민→친(親)자민’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反)자민 노선추구를 추구한 하토야마 총리는 신사참배에 대한 명확한 거부와

방한 시 국립현충원 참배 등을 통해 다시 사과외교를 돌려놓고자 하였다. 이후 등장한 중도좌파의 성향의 간 총리는 ‘반(反)자민’ 노선에서 현실주의를 가미한 ‘반(半)자민’ 노선을 선택하였다. 센카쿠 분쟁을 통해 가시화된 중국 위협은 중도좌파 성향인 간 총리의 노선과 민주당의 아시아 중시외교의 노선을 강화시켰고 이는 사과외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친(親) 자민’ 노선을 택한 노다의 등장은 겨우 안정을 찾은 한일관계를 다시 위태롭게 만들었다. 중국 위협의 심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사죄요구발언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응은 강경보수 성향인 노다 총리의 반동노선을 강화 및 심화시켰고 이는 민주당의 사과외교에 중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일본의 사과에 대한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외교의 대전략 노선의 방향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과외교는 평화국가 또는 중견국 국제주의 노선 추구를 위한 하나의 구성물이다. 미야자와, 호소카와, 무라야마, 오부치, 하토야마와 간 내각은 전후 일본의 대전략 노선을 평화주의 국가와 중견국 국제주의로 확립하기 위해 반성과 사과의 흐름을 선택했다. 따라서 사과표명은 단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당연립을 위함이다. 호소카와 내각의 경우 ‘비자민·비공명’으로 출범했지만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공약실행을 위해선 사회당과의 연립이 필수였다. 따라서 전범국가로서의 반성과 주변국들에 대한 사과노선의 선택은 사회당과 연립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였다. 오부치 역시 자민당 출신 총리였지만 금융 재생을 위한 법안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공명당과의 연립이 필수였다. 미일동맹과 아시아 외교를 중시했던 공명당과의 연립은 오부치의 사과노선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한국의 전략적 활용을 위함이다. 간 내각의 경우, 센카쿠 사태로 인한 중국의 위협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는 일본의 적극적 한국 포섭전략으로 귀결되었고 ‘간 담화’를 통해 한국 국민에 대한 사과와 조선의제 반환과 같은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오부치 내각 역시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고조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던 시기였고 오부치 총리의 사과는 한일 역사상 가장 호혜적인 관계의 초석이 되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타결을 이루었다. 기시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이어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¹⁷⁸⁾

제1기, 제2기, 제3기와의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최근의 위안부 타결은 앞으로 상당한 반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과와 화해의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강제연행 인정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이 강제연행을 인정하였다고 밝혔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¹⁷⁹⁾ 이는 사과와 화해의 1단계인 ‘가해국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둘째, 사과 표명의 문제이다. 사과의 주체와 대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하지만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성립을 갖추지 못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정부에 사과하는 형태는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에도 반복되어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부와 정대협의 의견불일치로 실질적인 사과 대상이 불명확해진 결과이다. 이번 위안부 협상은 ‘선타결 후보고’의 형식은 정부와 정대협의 의견불일치, 또 이로 인한 다중신호의 문제가 극대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¹⁸⁰⁾

178) 「한겨레」, 2015년 12월 28일.

179) 「중앙일보」, 2016년 2월 17일.

셋째, 배상의 문제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 고 기술되어있다.¹⁸¹⁾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배상’ 이 아니라 ‘지원’ 이라고 밝혔다.¹⁸²⁾

넷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는 문구의 문제이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겠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¹⁸³⁾ 하지만 인정, 사과,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단계로의 진입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일본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의 움직임은 또 한 번의 강력한 반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사과는 진정성의 문제가 아닌 정치성의 문제이다. 한국의 지속적인 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본의 사과와 반동의 부침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야자와, 호소카와, 오부치 총리는 자민당 출신의 총리였고, 사과를 거부한 노다 총리는 민주당 출신이었다. 이는 기존 1세대와 2세대 학자들이 지적한 보수 세력들의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의 문제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과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에 대한 철저한 계산, 즉 정치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과의 접근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과와 반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한일 간 안정적 단계의 화해로 가기 위한 핵심은 또 한 번의 사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동의 제어 또는 공동 관리에 있다는 점이다. 즉 화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 사과가 아닌 그 반대에 있는 반동에 더욱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레테라가 지적하듯이 ‘화해는 과거에 대한 인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공유의

180) 「한국일보」, 2015년 12월 29일

181) 「중앙일보」, 2016년 2월 17일.

182) 「중앙일보」, 2016년 1월 11일

183) 「朝日新聞」, 「産経」, 2016년 1월 30일.

장이며 이는 현재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¹⁸⁴⁾ 따라서 현재 한일관계에서 사과문제는 미래 양국관계의 정체성의 변화와 관계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기, 제2기, 제3기를 거치면서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사과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아베 내각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과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184) Lederach, 1998. pp. 236-245.

자료 및 참고문헌

1차 문헌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国会會議録検索システム)

내각관방(内閣官房) <http://www.cas.go.jp/>

동아시아연구원, Genron 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2013-2015)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1110181300

대한민국 외교부(外交部) <http://www.mofa.go.kr/>

수상관저 홈페이지(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http://www.kantei.go.jp>

아사히신문, 동경대 타니구치 연구실 선거유권자 및 후보자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2003- 2013)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

<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index.html>

일본외무성(外務省) <http://www.mofa.go.jp>

중의원(衆議院) <http://www.shugiin.go.jp>

참의원(参議院) <http://www.sangiin.go.jp>

http://kokkai.ndl.go.jp/KENSAKU/swk_startup.html

일본 수상 및 정당

간 나오토(菅直人) 공식 홈페이지 <http://n-kan.jp>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공식 홈페이지 <http://www.nodayoshi.gr.jp>

민주당 民主党ホームページ <http://www.dpj.or.jp>

자민당 <https://www.jimin.jp/index.html>

자민당 2012 정책집 自民党. 「J-ファイル2012 自民党総合政策集」

자민당 2013 정책집 自民党. 「J-ファイル 2013 総合政策集」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공식 홈페이지

<http://www.hatoyama.gr.jp>

위안부 관련 자료

위안부관계조사결과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河野談話）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무라야마 총리 담화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에 즈음”

村山内閣総理大臣談話「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책

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これまでの施策，日本国外務省，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ianfu.html>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상호작용의 경위 - 고노담화부터 아시아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首相官邸 2014年（平成26年）6月20日付け）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4/_icsFiles/afieldfile/2014/06/20/20140620houkokusho_2.pdf

아시아여성기금사업개요

外務省，“アジア女性基金による事業の概要”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asia_jk_genjyo.html

일본신문

교도통신(共同通信社) <http://www.kyodo.co.jp/>

산케이신문(産経) www.sankei.com/

아사히신문(朝日新聞) www.asahi.com/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社) <http://www.mainichi.co.jp/>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www.yomiuri.co.jp/

한국신문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중앙일보 www.joongang.co.kr/

한겨레뉴스 www.hani.co.kr/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의원 및 시민단체

일본회의 日本会議 <http://www.nipponkaigi.org/>

창생일본 創生「日本」 <http://www.osei-nippon.jp/>

신도정치연맹 神道政治連盟 <http://www.sinseiren.org/>

새역모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http://www.tsukurukai.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にほんぐん「いあんふ」もんだいかいけつぜんこくこうどう）
<http://restoringhonor1000.info/main/index.html>

일본어 단행본 및 논문

アーミテージ, リチャード・L & ジョセフ・S・ナイ, 2010. 『日米同盟 vs. 中国・北朝鮮』 東京: 文藝春秋.

木宮正史, 2007. "日韓関係の力学と展望: 冷戦期のダイナミズムと脱冷戦期における構造変容." 国際基督教大学学報 II-B, 『社会科学ジャーナル』 Vol. 61.

麻生太郎. 2008. "消費税を10%にして基礎年金を全額税負担にしよう." 『文芸春秋』 (8月号).

石川真澄. 1995. 『戦後政治史』. 東京: 岩波書店

한글 단행본 및 논문

구유진 2014.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일본공간』 Vol. 16.

고선규. 2015. "일본자민당 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배경," 『일본공간』, Vol. 18.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 2006. 『역사교과서의 대화—유럽은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서울: 역사비평사.

김도형, 아베 마코토 편. 2015. 『한일관계사 1965-2015: 2 경제』. 역사공간.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2』, 삼인.

김문규. 1992. "PKO협력법 제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 『정세연구』 Vol. 35.

- 김영옥. 2011. “병합 100 년, 일본은 사과했는가?,” 『언론과 사회』
Vol. 19. No. 1.
- 김정란. 2004.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우. 2004. 『일본현대정치사』 . 아카넷.
- 김채수 2008. 『일본 우익의 활동과 사상 연구』 , 고려대학교출판부.
- 나카소네 야스히로. 2011. 『보수의 유연』 , 중앙북스.
- 남상구. 2015.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편, 『한
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 . 역사공간.
- 노다니엘, 2006. 『우경화하는 신의나라』 , 랜덤하우스코리아.
- 노리 하야시. 2005. “역사교과서 문제와 일본정치의 동향.” 『문화과학』 ,
Vol. 42.
- 다카사키 소오지, 1996. 『일본망언의 계보』 , 한울.
- 박성빈. 2015.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한일 금융통화협력,” 김도형, 아
베 마코토 편, 『한일관계사 1965-2015: 2 경제』 . 역사공간.
- 박영준. 2015.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일
본비평』 , Vol. 12.
- _____. 2010. “일본 <방위계획대장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
점,” 『EAI 논평』 No. 16.
- 석주희. 2014. “일본의 공식사과와 국가
사회관계: 무라야마 담화를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
술회의 발표문.
- 박철희. 2006. “일본 야당세력의 재편과 정당경쟁체제.” 『한국정치학회보』 ,
Vol. 40, No. 5.
- _____. 2011.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 _____. 2011. “일본 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1960 년
대와 1990년대의 비교.” 『일본연구논총』 , 2011.
- _____. 2014.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Vol. 10,

- _____. 외, 2014.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소에야 요시히데, 2006.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 오름.
- _____. 2012. “중국의 대두와 한일협력,” 하영선, 오코노기 편,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손열.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하영선 편,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연구원, 2008)
- _____. 2009. “일본의 21세기 동맹전략-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EAI, NSP Report 34』
- 오하타 히데키, 2007. “‘대포동 미사일 문제’와 3국간 협조-한일비교,” 『한일공동연구총서』, Vol. 9.
- 오노 고지, 이기완 옮김, 2003. 『일본 현대 정치사: 1945-1998』, 케이시.
- 이원덕. 2012.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하여,” 하영선, 오코노기 편, 『한일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_____. 기미야 다다시 편. 2015. 『한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 역사공간.
- 이이범. 2010. “제 22회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분석,” 『일본연구논총』
- 장인성. 2010.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경엽, 허원제. 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전진호. 2005. “21세기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일군사문화연구』 Vol. 3.
- 정미애. 2008.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일본연구』, Vol. 37.
- 천자현, 2012. “화해의 국제정치 : 국가 간 화해의 유형과 가해국 정책 결정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4. “국제정치에서 공식적 사과의 이론과 실제: 공식적 사과의 분류와 일본 사과문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Vol. 54. No. 3.
- 최영호. 2006.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 논형.
- _____. 2008.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 논형.
- _____. 2010. 『한일관계의 흐름 2008-2009』, 논형.
- _____. 2011. 『한일관계의 흐름 2010』, 논형.
- _____. 2013. 『한일관계의 흐름 2011-2012』, 논형.
- 한상일. 1999. “비틀린 전후사와 사죄의 주체-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한 양상.” 『계간 사회비평』, Vol. 22.
- 현대일본학회. 2008. 『일본정치론』, 논형.
- 히라이와 순지, 2012.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하영선, 오코노기 편,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한의석. 2011. “고이즈미의 등장과 자민당의 정책변화-도시유권자와 선거정치.” 『한국정치학회보』. Vol. 45, No. 4.
- 히라이와 순지. 2012.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하영선, 오코노기 편, 『한일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영문 단행본 및 논문

- Ackermann, Alice. 1994. “Reconciliation as a Peace-Building Process in Post-War Europe: The France-German Case.” *Peace & Change*, Vol. 19, No. 3.
- Barkan, Elazar and Karn, Alexander (eds.), 2006. *Taking wrongs seriously: apologies and reconcili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r-Tal, Daniel and Gemma H. Bennink. 2004.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Bar-Siman-Tov, Yaacov,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enfell, Stephen. 2002. "Why Can't Japan Apologize? Institutions and War Memory Since 1945." *Harvard Asia Quarterly*.
- Bennett, Andrew and Checkel, Jeffrey (eds.), 2014. *Process trac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ett, Andrew and George, Alexander. 2001. "Case Study and Process Tracing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in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 Charles Vila–Vicencio et al. (eds.), 2000. *Looking Back, Reaching Forward: Reflections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CapeTown and London.
- Checkel, Jeffrey T. 2008. "Process Tracing," in Audie Klotz and Deepa Prakash (eds.),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Pluralist Guide*, London: Palgrave Macmillan
- Chun, Ja hyun. 2015. "Beyond "Dissatisfaction" and "Apology Fatigue" : Four Types of Japanese Official Apology." *Pacific Focus*, Vol. 30, No. 2.
- Goffman, Erving. 2009. *Relations in Public*. Transaction Publisher.
- Cohen, Raymond. 2004. "Apology and Reconcil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Yaacov Bar–Siman–Tov (eds.),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er, David. 2011. "Understanding process tracing."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44, No. 4.
- Crocker, David. 1999.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 Dodds, Graham. 2003. "Political Apologies and Public Discourse,"

- in Judith Rodin and Stephen P. Steinberg, (eds.), *Public discourse in America: conversation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Edwards, Jason. 2005. "Community Focused apologia in International Affairs: Japanese Prime Minister Tomichi Murayama's Apology."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6.
- Felman, Lily. 1999.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Reconciliation in German Foreign Policy: Relations with France, Ireland,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2.
- Field, Norma. 1995. "The Stakes of Apology," *Japan Quarterly*, Vol. 42.
- George, Alexander and Bennett, Andrew.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Mit Press.
- Grosser, Alfred. 1977. *French foreign policy under De Gaulle*, Greenwood Press.
- Hasegawa, Tsuyoshi and Togo, Kazuhiko (eds.), 2008. *East Asia's Haunted Present: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ABC-CLIO.
- Ifat, Maoz. 2011. "Does contact work in protracted asymmetrical conflict? Appraising 20 years of reconciliation-aimed encounters between Israeli Jews and Palestinian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8, No. 1.
- Kelman, Herbert. 2004. "Reconciliation as Identity Chang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Yaacov Bar-Siman-Tov,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Kratochwil, Friedrich, 1991. *Rules, norms, and decisions: on the conditions of practical and legal reaso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affai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zare, Aaron. 2005. *On A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derach, John Paul. 1997.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_____. 1988. "Beyond Violence: Building Sustainable Peace." In E. Weiner (eds.), *The Handbook of Interethnic Coexistence*. New York: Continuum.

Lind, Jennifer. 2009.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 18, No. 3.

_____. 2011.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Marc Howard Ross, 2004. "Ritual and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Yaacov Bar-Siman-Tov (eds.),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Mahoney, James. 2012. "The logic of process tracing tests in the social scienc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Mulgan, George. 2002. *Japan's Failed Revolution: Koizumi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Australia: Asia Pacific Press.

Nobles, Melissa. 2008. *The politics of official apolo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muels, Richard. 2007. *Securing Japan*, Cornell University Press.

Park, Cheol Hee. 2004. "Political Dynamics of Regime

Transformation in Japan in the 1990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 No. 2.

-
- _____. 2008. "Historical Memory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in Korea," in Tsuyoshi Hasegawa and Kazuhiko Togo (eds.), *East Asia's Haunted Present: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Historical Memories and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ABC-CLIO.
- Pempel, T.J. 2007. "Japanese Strategy under Koizumi," in Rozman, Togo, and Ferguson, *Japanese Strategic thought towards Asia*. Palgrave Macmillan.
- Philips, Ann L. 1998.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German Politics*, Vol. 7, No. 2.
- Reed, Steven R. and Scheiner, Ethan. 2003. "Electoral Incentives and Policy Preferences: Mixed Motives behind Party Defections in Japa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3, No. 3.
- Schlesinger, Jacob. 1997. *Shadow Shoguns: The Rise and Fall of Japan's Postwar Political Machine*. New York: Simon & Schuster.
- Takashi, Yoshida. 2000. "History Textbooks: For Whom and for What Purpose?." *Asian Studies Newsletter*.
- Tavuchis, Nicholas. 1991. *Mea culpa: A sociology of apology and reconcili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yeneth, Robert R. 2001. "The Power of Apology and the Proces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The Public Historian*, Vol. 23, No. 3.
- Yamazaki, Jane. 2012. *Japanese apologies for World War II: A rhetorical study*. Routledge.

Abstract

Politics of Apologies in Korea and Japan Relations: A Study on Japanese Political Backlashes

Sungpyo H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ason why political backlashes occur opposed to apology. Despite numerous apologies that Japanese government has expressed, why isn't a repeated apology of Japan leading to reconciliation? Previous studies argue the 'political backlash (denial) as a cause of apology' as the main cause of such phenomenon. They argue that the political backlash after official apology provokes people of South Korea, thus, rather makes the relationship worse.

However, there still are numerous unanswered questions such as 'Why is Korea still asking for apology even after numerous expression of apologies?' , 'Why does a political backlash occur at a specific moment with a specific method?' In order to fill in such loophole,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of 'Why do political backlashes occur as opposed to apologies?'

To answer such question, the research has divided the periods

into three; Miyazawa (1991) to Hashimoto administration (1998) as phase one, Obuchi (1998) to Aso (2009) as phase two, and Hatoyama (2009) to Noda (2012) as phase three. It also adopted trace-process tracing method to explore how inter-party politics and intra-party politics influenced political backlashes through out the periods. Variables that cannot be explained with inter and intra-party politics were complemented with Korea's respons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variables.

The causes of political backlashes in phase one can be summarized as inter-party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conservative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progressives (Socialist Party).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with the necessity of forming an active foreign policy, active apologies were made by Miyazawa, Hosokawa, and Murayama administration. However, a repeated apology of Japanese government rather caused backlashes from the opposing factions. Despite Hashimoto administration was a conservative liberal whose basic stance is for apology, his period was filled with aggressive backlashes in order to deny and withdraw the previous apologies of former administration.

The causes of political backlashes in phase two can be summarized as intra-party political competition within the LDP, specifically between the conservative liberals (Heisei/Cochi) and conservative rights (Seihwa). Due to economic a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late 1990s, Obuchi administration had to make good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Korea. However, with the advent of Koizumi's administration, previous apology diplomacy of the conservative liberals was totally denied and turned over. In the process of justifying Koizumi's internal and external policies, political backlashes were increased and solidified.

The causes of political backlashes in phase three can be

summarized as intra-party political competitio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specifically among the middle-conservatives, middle-left and far right factions. Prime minister Hatoyama (middle-conservative) and Kan (middle-left) chose to focus its foreign policy at East Asia and made diplomatic efforts including apology in order to recover the relations that had been deteriorated by Koizumi and Abe. However, these movements faced another transition from Noda (far right) administration, Japan was faced with physical threats from China with the advent of Senkaku/Diaoyu conflict. Furthermore, President Lee Myung Bak visiting Dokdo and requesting the apology of the Emperor dismantled foreign policy basis of the Democratic Party. This provided the basis for later political backlashes.

The conclusions for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pology does not come from deep remorse of the past but from political calculation of the future. Second, the key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settle into a stable level of peace is not in another sincere apology from Japan but from the management of domestic political backlashes of Japan. Third, apology issue is indeed a key for the two countries to step into reconcilia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apology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is further decreasing. This phenomenon has deepened with current Abe's administration, making apology issue even harder to resolve.

Keywords: political backlash, apology, apology-backlash mechanism, inter-party politics, intra-party politics

Student Number: 2013-22890